

박정희 실정백서

그러나 歴史가 그들을 斷罪할 것이다



만주군 '예비소위' 박정희

박정희의 실정백서 그러나 歴史가 그들을 斷罪할 것이다

2000. 12

성공회대기념관

CPH1.35

박정희실정백서 그러나 歴史가 그들을 斷罪할 것이다

2000년 12월 4일 인쇄

2000년 12월 5일 발행

발행인 함세웅, 조희연 외 11인

발행처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 금은빌딩 301호

전화 02-959-0715 팩스 02-965-8879

성공회대 민주화운동자료관

서울시 구로구 향동 1-1

전화 02-2610-4297 팩스 02-685-1663

<비매품>

2000. 12. 5.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 성공회대 민주화운동자료관

글 실는 순서

10월호 10월호 10월호 10월호 10월호 10월호 10월호 10월호 10월호 10월호

- 발간사 2
- 국민연대 결성 선언문 4
- 국민연대 활동일지 6

하나. 오욕의 역사, 박정희 7

- 박정희 시대의 억압과 저항의 변증법 조희연 / 9

둘. 박정희 실정사례 25

- 1. 박정희와 친일문제 전 명 혁 / 27
- 2. 박정희와 변절·배반 전 명 혁 / 33
- 3. 박정희와 독재문제 조 현 연 / 42
- 4. 박정희와 부패문제 오 유 석 / 65
- 5. 박정희와 노동자·민중수탈 김 동 춘 / 72

셋. 박정희 관련 자료 모음 77

넷. 사회단체 성명서 181

- 참고문헌 204

제목설명 『신동아』 1989년 12월호에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가 기고한 글 중에서. 내용은 본문 자료모음 참조.

사진설명 최초로 공개되는 만주군 '예비소위' 박정희의 모습. 사진은 박정희가 만주군 관학교와 일본 육사(본과) 졸업후 2개월간의 사관견습을 마치고 소위로 임관하기 직전인 1944년 6월말 일본군 소조(상사에 해당) 복장으로 찍은 것이다.

당시 만주군 장교는 어깨에, 일본군 장교는 목칼라에 계급장을 달았다. 배부분의 등근 버클은 장교를 나타내는 장교대로, 견습사관 시절에는 윗옷 겉에 착용하다가 임관 직후에는 허리띠에 부착해 사용했다. 어깨의 대각선 가죽띠는 작전명령서와 지도, 색연필 등을 넣고 다니던 즈노.

21세기는 정의를 세우는 세기가 되어야 합니다.

인류에게는 물론 우리 민족에게도 가장 불행했던 세기였던 20세기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세기가 다시는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지역과 단체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과거사에 대한 청산 또는 반성이라는 전지구적 시대 정신 앞에 우리는 서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우리 사회는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회의적 전망의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이른바 박정희 기념관 건립입니다.

어느 누가 도도한 시대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망각과 반역의 바벨탑을 세우려 하는 것입니까.

모순되고 뒤틀린 한국 현대사 속에는 어김없이 박정희가 있었고, 그는 언제나 시대와 역사, 그리고 민중의 정반대편에 서왔습니다.

박정희는 기념의 대상이 아닌 청산과 극복의 대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박정희는 단지 한 개인을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부끄럽고 굴욕적이었던 한 시대와 부도덕하고 부패한 집단을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사의 모순을 청산하고 극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들 마음과 몸 속에 암종과도 같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박정희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됩니다.

박정희를 상대로 고난을 마다 하지 않았던 많은 민주인사 분들이 자신의 동지였던 김대중 대통령을 상대로 다시 거리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민주화를 위해 박정희에 저항하다 고통 당한 많은 분들이 그대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요즘 그분들에 대한 물질적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끝까지 추진한다면 그것은 보상이나 예우와 상관없이 민주화 동지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민주화 동지들의 마지막 신의를 저버리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대통령이 수상하게 될 노벨 평화상은 바로 박정희를 상대로 함께 투쟁한 동지들의 피와 고난에 대한 세계 양심의 뒤늦은 찬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는 건국이후 과거에 대한 반성이 철저히 결여된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래에 대한 전망도 사회구성원간의 통합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김대통령은 박정희 기념관이 화해의 메시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란 철저한 반성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2차 대전 당시 레지스탕스 활동에 가담하면서 나치에 협력한 프랑스인에 대해 강력한 응징을 주장한 바 있는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트 까뮈'는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지 않는 것, 그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화해를 논하기에 앞서 반성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부족하나마 이 백서가 역사의 퇴행과 정의의 상실을 조금이라도 막아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적 촉박함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백서 발간을 가능케 한 <민주화 운동자료관> 측과 <민족문제연구소>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전합니다.

2000년 12월 5일

함 세 응 신 부

박정희 기념관반대 국민연대 상임대표

결성 선언문

지금 우리는 민족사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반세기를 헤맨 끝에 6·15 남북정상회담으로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과 상호번영을 위한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중차대한 시기에 반민족, 반민주의 상징인 박정희 전대통령을 찬양하는 기념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이 정부의 주도 아래 진행되고 있다.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본군 장교이자 쿠데타로 헌법을 유린한 민주헌정파괴자이며, 민족의 평화적 자주통일을 위해 몸바쳐 투쟁해 온 수많은 애국자들을 투옥 탄압했던 독재자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 건립은 반통일적 냉전수구세력들의 기득권 수호에 발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추진은 박정희 덕택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화를 누리고 있는 반통일적 반민족적 기득권세력들의 이류 헤아릴 수 없는 범죄행위들을 정당화하는 폭거이며 민족사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 추종자들이 공로로 드는 것은 오직 하나, 경제성장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저력의 소산이다. 그것이 어찌 박정희 1인만의 공적인가! 박정희식 경제성장의 밑천으로 되었던 대일 청구권 자금은 일본제국주의가 우리 민족에게 자행한 수많은 범죄사실을 불과 몇 푼의 돈으로 팔아먹고 부패세력들이 웃돈을 챙긴 반민족적 범죄행위였다. 허울좋은 '고도성장의 금자탑' 아래에는 오늘도 고엽제 후유증에 시달리는 수만명 베트남 참전용사의 비극과 베트남 민중의 한이 배어 있다. 박정희가 휘날린 조국근대화 깃발에는 저임금 장시간 중노동에 항의하다 무참히 짓밟힌 전태일 열사를 비롯한 노동자의 피가 묻어 있다. 새마을운동은 폐허화된 농촌과 인구의 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하여 수백만 도시빈민이 신음하는 오늘의 빈부격차를 잉태했다.

박정희는 20년 가까운 장기집권을 통해 군국주의, 성장주의, 한탕주의, 돌격주의 등 이른바 박정희 이데올로기라는 왜곡된 가치관, 고질적인 정경유착, 재벌의 족벌경영 등으로 빛나간 경제구조를 조성함으로써 IMF 국치사태의 구조적 원인을 제공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인권탄압과 아직도 해명되지 않은 수많은 의혹사건들의 배후에 바로 박정희가 있다. 또한 그가 급사한 후 드러난 청와대에 감춰둔 엄청난 현금은 그의 과장된 서민적인 외양과 청렴성이 수구보수 언론들의 철저한 여론조작 산물임을 입증하고 있다!

박정희는 결코 기념할 인물이 아니다. 오히려 식민지와 분단, 그리고 남북대결로 이어진 오욕의 20세기를 극복하고 21세기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청산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엄연한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김대중대통령은 박정희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명예회장직을 맡아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 박정희를 기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고건 서울시장도 권력의 틈바구니에서 박정희 추종세력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서울의 상징적 지역인 상암동 지역에 박정희 기념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한쪽으로 민주화 희생자 진상규명과 기념사업을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그 범죄자인 박정희를 기념하는 이 엄청난 역사의

모순을 후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산화해간 독립선열들의 위령탑 하나도 세우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를 한탄하면서 우리는 설령 박정희 추종자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 그의 동상과 기념관을 세운다해도 이 땅에서는 한치의 땅도 내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은 박정희 기념사업이 아니라 박정희 청산사업이 시작될 때이다. 이제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는, 올바른 역사 반성을 통한 21세기 민족사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이 땅의 모든 양심세력의 힘을 결집하여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결사 반대와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앞장서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하나.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민족의 이름으로 반대한다.

하나. 김대중대통령은 박정희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명예회장직을 사퇴하고 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든 정치적 행위와 국민혈세 남용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박정희 시대에 일어난 외화도피를 비롯한 모든 비리의혹사건과, 장준하 선생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의 의문사, 인혁당 사건을 비롯한 인권탄압등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역사교과서를 바로 잡아라.

하나. 정부는 박정희의 동상을 비롯, 그를 찬양하는 유물들을 철거하라.

하나. 정부는 박정희 기념관건립지원계획을 취소하고 일제와 싸우다 산화해간 독립선열들의 추모와 위령사업에 앞장서라.

2000년 9월 28일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강원지역(춘천민주연대, 철원강원연대) / 경기지역(수원세시연대, 수원민주노동자, 안산세시대동일구어 기는 청년들, 안산노동자청년회, 평택청년21, 평택일시청년노동자, 안양 일하는 청년회, 수원지역건설노동자노동조합, 안산시청청년회, 평택지역건설노동조합, 수원지역여성노동조합, 수원지역금속노동조합, 안산지역여성노동조합, 평택지역여성노동조합, 민주주의민족통일 경기동부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경기남부연합, 성남지역노동자, 성남시청청년회, 성남청년회, 분당청년회, 용인노동자회, 광주노동자회, 하남청년회, 이천지역노동자회, 이천청년회, EYO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민주포럼, 김삼진기념사업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나라사랑청년연합회, 노동인권회관, 녹색연합, 대한민국의독립유공자유족회, 동아시아역사연구회 / 마산·청원 (경남대학교동문공동체, 마산가톨릭여성회, 경남청년대문예 대학을 위한 시민연대오인, 열린사회희망연대, 한국민족예술인연합 마산청년지부, 마·청·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교조 경남지부, 전교조 마산지회, 위헌공단지사 경남총괄본부, 녹색공동체, 민주노동 마창시청의회, 마창 환경운동연합, 마산대학 용당동우회, 창원대학교 창우회, 3·15의거기념사업회) / 문학예술연구소,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학작가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사회운동연합, 민족보존진상규명위원회, 민족청기수호협의회, 민족정치회복운동시민단체연합, 민족학회, 민족최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연맹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원회, 비문역사찾기시민모임, 박정희기념관건립및국고지환대물위환전국역사학자모임 / 박정희 기념사업 정부지원 반대를 위한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건국사회를 위한 한의사회 대구경북지부, 경북대기독교 연대회의, 경북대 민주동맹회, 경신민주청년회, 경신지역민주단체협의회, 경주민주청년회, NCC대구인권신교위원회, 대구경북 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북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대구경북양심수후회, 대구경북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노동운동단체협의회, 대구노동자회 일넷, 대구민주청년회(준), 대구신업보건의료, 대구여성회, 대구진보청년회, 대구참여민주주의시민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미군기지명 퇴출기 시민모임, 민간도서관 더불어 숲,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 민족자주평화회의 대구경북회의, (가행)민주노동당 내부추진위원회,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 대구경북연합, 박동학 추모사업회, 새대구경북시민회의, 새로운 청년회 (준), 손석용 열사 추모사업회, 이프르생물문제연구소, 일하는 사람,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대구경북연합, 청년진보당 일사적 지구당, 한국청년연합회 대구지부, 환경연대, 희망의 시민포럼) < 2000. 9.27 현재 총 247개 단체 참가 >

활동 일지

- 9월 28일 : 전국 248개 단체의 참가로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출범 (향린교회)
- 10월 17일 : '10월유신' 선포 28돌을 맞아 전국대학교수 649명 박정희 기념관 반대 서명
- 10월 26일 : 박정희 기념관 반대 집회 개최(시청 앞)
- 11월 5일 : 민족문제연구소 등 5단체 박정희 흉상 철거
- 11월 7일 : 흉상 철거 지지 기자회견 개최(홍익대)
- 11월 14일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위원회】와 공동으로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양민학살 보고서 발견 기자회견 개최(느티나무)
- 11월 14일 : 상암동 부지 제공에 대한 서울시장 항의 면담
- 11월 18일 : 국민연대 후원, 참여연대 주최로 『박정희 기념관 또는 기록관 논란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긴급토론회 개최(국회 소회의실)
- 11월 24일 : 박정희 기념관 반대 2차 집회 개최(국회 앞)
- 12월 5일 : 대통령 면담 요구와 청원서 제출, 박정희 백서 발간

박정희 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 130-866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 금은빌딩 301호

전화 02-959-0715

팩스 02-965-8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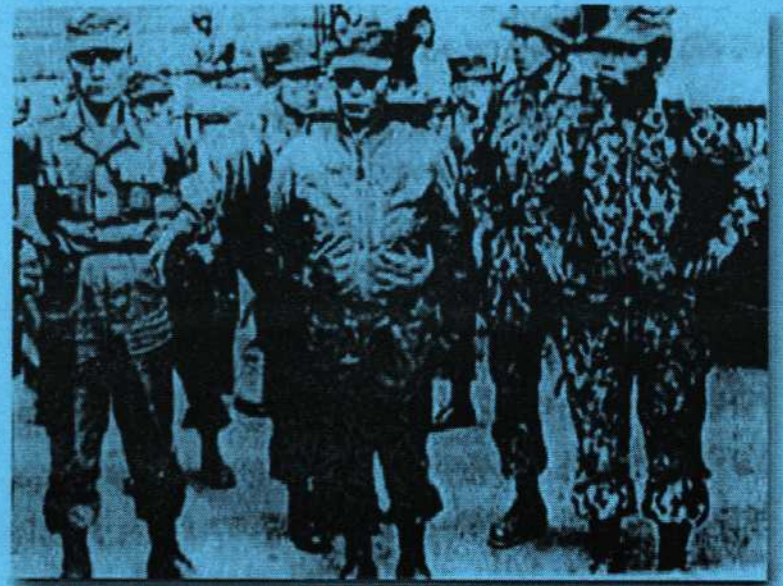
이메일 anti516@hanmail.net 홈페이지 http://anti516.jinbo.net

은행계좌 국민은행 006-21-0982-730

(주종환, 박정희기념관 반대 국민연대)

하나

소속의 역사, 박정희



박정희 시대의 억압과 저항의 변증법

-박정희 정권 하의 정치변동과 저항운동-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성공회대 민주화운동자료관 관장

박정희 시대는 한국근현대사에 있어 최대의 '민주주의 암흑기'로 기록된다. 이 시대의 전반기에는 5. 16 군사쿠데타를 통해 불법적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안보와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독재를 감행했던 정권이 있었고, 후반기에는 온 이러한 단계를 뛰어넘어 국민의 손과 발, 입을 송두리째 억압적 법으로 묶어버렸던 '전체주의'화된 '독재를 위한 독재' 정권이 있었다.

'박정희 신드롬'이 존재하는 현 시기에 일부 사람들은 박정희 시대가 정치적으로 대단히 안정되어 있고, 국민들이 박정희 식 통치와 정책에 동의하면서 따랐던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박정희 통치 18년간의 시기는 사실 위기의 연속이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쿠데타를 통해 국가권력을 찬탈하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정치적 정당성의 위기에 시달려야 했으며, 장기집권 및 전체주의체제로 치달아가는 60년대 후반 이후 3선개헌이나 유신체제 구축을 통해 장기집권 및 전체주의체제로 치달아가는 60년대 말·70년대 초반 이후에는 만성적인 정치위기에 시달려야 했다.

박정희 정권이 추진하였던 경제개발은 취약한 정치적 정당성을 일정부분 보완하기는 했으나, 경제개발의 추진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추진하였던 한일회담 및 한일국교정상화는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의적 정체성 자체를 의문시하게 하였으며, 경제개발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게 되는 60년대 말 이후에는 경제개발의 모순들—부실기업의 문제,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민중착취의 문제, 중화학공업화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정경유착 등—이 표면화하게 되고, 역으로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처럼 만성적인 정치적 위기를 만회하기 위하여 박정희 정권은 억압과 통제정책을 일상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 정권의 전기간은 억압과 저항의 악순환으로 점철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개발을 위한 독재, 그 독재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투쟁, 그러한 투쟁을 상쇄하기 위한 일상적인 억압으로 특징지어지는 박정희 정권 시기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자.

2차세계 대전을 계기로 독립을 획득한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은 새로운 민족국가의 발전방향을 둘러싸고 격렬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겪게 된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갈등이 통일된 민주주의적 민

죽국가의 성립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분단으로 귀결된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분단 이후 남한 사회는 극우반공주의적 성격을 갖는 '반공규율사회'(한국전쟁 이후 남한사회에 형성된 독특한 극우반공주의적 성격을 지칭한다. 조희연,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당대, 1998, 2장)가 출현하게 되었고 이러한 조건 위에서 '이식된 민주주의'는 점차 민간권위주의정권(이승만정권)으로 타락해가게 된다. 60년 4. 19혁명은 바로 이승만 정권 하에서 타락과 부패로 고사되어가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민주혁명이었다. 5. 16군사쿠데타는 바로 이처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국민혁명을 부정하면서, 일부 군부세력들이 국가권력을 찬탈한 반민주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5. 16 군사쿠데타를 분기점으로 18년간의 시기는 바로 민주주의가 부정된 권위주의체제의 시기였다.

이러한 남한에서의 군부정권의 성립은 한국사회 만의 예외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오랜 제국주의적 지배 하에서 독립을 획득한 신생독립국들 중 완벽한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고 또다시 종속적 체제로 귀결되게 된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집권엘리트들의 정치적 욕심과 구 세력들의 반개혁적 저항 등으로 인하여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그 위기의 시점에 대체로 민간정권의 붕괴와 (군부)권위주의정권의 성립을 보게 된다. 이 권위주의정권에 대한 오랜 투쟁으로 인하여 결국 민주주의는 회복되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나타나게 된다. "이식된 민주주의—신생정부의 정치적 불안정—민주주의의 부정으로서의 권위주의정권의 출현—권위주의정권에 대한 민중적 저항의 확대—권위주의정권의 붕괴와 민주정부로의 이행"이라는 제3세계 일반적인 정치변동의 과정에서, 5. 16 군사쿠데타와 군부정권의 성립은 신생 정부의 정치적 불안정을 빌미로 한 반(反)민주적 권위주의정권 출현의 대표적인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민주적인 권위주의정권은 자신의 취약한 정치적 정당성을 상쇄하기 위하여, 미국이 60년대 이후 제3세계 국가들에게 추종하고 있는 근대화 전략을 적극 수용하면서 '종속적' 산업화 혹은 자본주의화를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권위주의정권의 산업화가 종속적 성격을 띄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전후 국제분업질서에 종속적인 하위파트너로 포섭되는 것을 의미하고, 자국의 경제적 재생산구조가 미국 등 선진국 독점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재생산구조의 유기적인 일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단고착세력들의 위기의식, 또한 미국강경파의 위기의식을 배경으로 하여, 군사쿠데타를 감행하고, 쿠데타 이후 통일운동세력 및 민족주의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감행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5. 19군사쿠데타는 단순히 4. 19민주혁명에 대한 반혁명의 성격을 띠는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운동의 민족통일운동으로의 발전에 대한 지배세력의 '반동적' 공세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적 에너지를 '반동적'으로 억압함과 동시에, 국민적 에너지를 경제개발, 자립경제 수립,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피 등으로 유도·전환하고자 하였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50년대 이승만 독재정권과 박정희 군사독

재정권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박정희 세력은 이제 더 이상 억압적 방법으로 억누를 수 없는 국민들의 민주주의적·민족적 에너지를 경제적 발전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통해 이 땅의 지배체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바로 이러한 일종의 지배의 '혁신'을 통하여 박정희 정권은 60년대를 정치적으로 겨우 유지할 수 있었다(그러나 국민들의 역동적 에너지가 경제발전의 에너지로 전환됨으로써 나타나는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박정희 정권은 60년대 말 이후 새로운 '자본주의적' 저항을 받게 된다. 이러한 '자본주의적' 저항이 민주주의적 저항과 결합되면서 박정희정권은 붕괴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 둘째의 소시기는 선거를 통한 집권 이후 한일회담 반대 및 한일협정비준 반대투쟁이 전개되던 시기이다. 박정희 세력은 가까스로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장악한 이후,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를 안정화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부응하여,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전개해 나가게 된다. 이 한일회담은 박정희 정권에게는 이중의 의미에서 쿠데타정권이라는 정치적 정당성 문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졌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국민적 정치적 정당성의 취약성을 미국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보완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일국교 정상화를 통해 얻어지는 대일청구권 자금 및 차관으로 초기산업화를 추동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대체하는 경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한일회담 반대투쟁은 그 굴욕적이고 정략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국민적 저항을 받았고 정권 자체의 위기로까지 발전하였다.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투쟁은 64년 3월 24일부터 서울에 비상계엄령이 발동되는 6월 3일까지에 걸쳐 전개되고, 한일협정비준 반대투쟁은 65년 2월 18일부터 서울지역 대학에 위수령 및 휴교조치가 발동되는 8월 27일(혹은 8월말)까지에 걸쳐 전개되게 된다.

한일회담 반대투쟁이 확대·격화되자, 군사정권은 민정이양 이후 처음으로 물리력을 이용한 진압(비상계엄령)을 단행하고, 더 나아가 '인민혁명당 사건'의 발표를 통해 냉전적 위기의식을 증폭시킴으로써 투쟁의 확대를 저지하고자 하였다. 한일협정비준 반대투쟁 역시 위수령이라는 강권적 방식에 의해 종결을 시도하게 된다. 당시 한일회담 반대투쟁으로 박정희정권에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당시 한일회담 반대정서는 전국민적인 것이었다. 이처럼 국민적인 정서적 지지를 받는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군사력으로 억압하게 되고, 이는 군사정권의 폭력성이 대중들에게 노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이후 반군사독재의식의 확산 및 비(非)정통성에 대한 인식의 심화를 통해 60년대 후반 이후 투쟁의 기초를 예비하게 된다. 또한 이 투쟁의 과정에서 '외세의존의 매판적 경제질서'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게 되는데, '매판제벌'이란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게 되는 시점도 바로 이 때이다(1963년 5월 30일 서울대 문리대생들은 '자유쟁취권리대회'를 열고 60년대 학생운동에서는 최초의 시도인 '단식투쟁'으로 투쟁방법을 전환하였는데, 이 때 발표된 선언문에서는 한일회담 반대투쟁의 기본이념을 '反買辦, 反外勢, 反封建, 反專制'로 설정하고 있다) 60년대 후반 '삼성 재벌 밀수반대 투쟁' 등 경제개발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받으며 자신의 축적기반을 강화시켜 가는 독점제벌에 대한 반대투쟁이 출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시기의 투쟁의 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정권의 정책에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은 국내적인 정치적 정당성이 없었던 만큼 그것을 상쇄하기 위하여 미국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적 정당성을 창출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무릅쓰는 자세를 취했다는 것이다. 이것의 한 예가 한일회담 추진이었었다면 다른 하나의 예는 월남파병이 될 것이다. 월남파병은 자국 내의 반전 분위기 때문에 '용병(傭兵)'을 필요로 하였던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파병의 경제적 효과를 염두에 둔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정권은 65년 경부터 월남파병을 실시하게 된다. 월남 파병의 경과를 보면, 64년 10월 국군 파월에 대한 한월(韓越)협정이 체결되고, 65년 1월에 비(非)전투부대 2,000명의 파견이 발표된다. 그후 정부는 65년 7월 2일 전투부대 1만 5천명의 베트남 파월을 발표한 후, 65년 8월 13일에 월남파병 동의안을 민주공화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1966년 2월 28일에는 전투부대 2만명의 증파를 결정하게 됨으로써 베트남 전쟁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게 된다. 월남파병에 대해서는 야당이나 (사상계)와 같은 잡지를 통해 반대여론이 조성되기는 하였지만, 격렬한 반대가 조직화되지는 못하였다. 박정희정권은 한편에서는 월남파병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이 취약한 박정희 정권은 월남 파병을 통해 미국의 지지를 획득하고자 하였으며, 산업화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파병군인들의 월급은 물론이고 월남과 관련된 각종 경제적 이권, 미국의 추가적인 군사경제적 원조 획득 등의 목적에서 월남파병은 추진되었다. 박정권으로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었는데, 이는 한국의 젊은 군인들의 피를 돈으로 바꾸는 '비정한' 정치논리가 숨어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박정희 시대가 남긴 어두운 유산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월남 파병시 한국군인들이 자행한 월남 양민학살문제였다. 최근 국제민주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이 문제가 쟁점화되었고, 이러한 쟁점화와 함께 월남에 사죄하고 평화위령탑을 건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월남양민들에 대한 국군들의 학살은 박정희 정권이 당시의 월남 정세를 베트남 공산화에 대항하는 자유세력의 '성전(聖戰)'으로 선전하였던 점, 월남 양민을 잠재적인 공산주의자로 보아 '섬멸(殲滅)'하고자 하는 자세를 국군들에게 주입되었던 점, 공격적인 행위를 '용맹'으로 이상화하였던 점 등에 의해서 보다 잔혹하게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보면, 월남파병은 전체적으로는 경제성장이 가속화되고 60년대 후반의 고도성장이 가시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면서, 정치적으로는 반공냉전 이데올로기의 내재적인 확대재생산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이었다. 이 월남파병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경색화(梗塞化) 때문에, 한일 회담에서 표출된 민족주의적 요구가 반(反)종속, 자립화, 자주화의 요구로 발전되지 못하게 되며, 60년대 후반 이후 70년대의 사회운동이 민족(해방운동)적 성격과 민중(해방운동)적 성격이 잠재화된 채로 전개될 수 밖에 없게 되는 중요요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과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필자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갖고 있다. 즉 미국은 위기에 처한 50년대 남한 지배체제의 안정화를 위하여 박정희 군부정권을 선택하였고, 미국은 정치적 정당성이 취약한 박정권을 이용하면서, 미국이 이전의 남한정부에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두가지 정

책을 관철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1)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블록체제를 공고화하는 것이요, 2)또 하나는 월남전에의 한국군을 참전시키는 것이었다. 쿠데타로 출범한 박정권은 미국의 지지를 획득하는 대가로 바로,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고자 하였다. 그것은 박정희 정권으로서도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정당성을 보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것이었다. 박정권은 1)과 2)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담보로 하여, 역으로 3선개헌 등 장기집권에 대한 미국의 동의를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미국은 월남전에의 한국군의 참전 확대 등의 필요 때문에도 이러한 박정권의 장기집권화에 '물려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게 되었고, 박정권은 3선개헌의 '여세'를 몰아 종신체제, 즉 유신체제의 구축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종신독재체제는 국내적으로 격렬한 민중적 저항을 촉발하였고 이는 김대중의 납치와 같은 박정권의 '국제적인 반인도적 만행'에 대한 국제적 비판여론과 결합하면서 미국 내의 여론도 악화시키게 된다. 이는 '반공을 위한 제3세계의 독재권 지지'라고 하는 미국의 제3세계 정책에 대한 미국 내의 비판과 결합하면서, 한미관계를 악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한미간의 균열은 월남전에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1975년 까지는 잠재화되었으나, 월남전의 종결과 카터정권의 등장으로 표면화되고, 여기서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박정권에 대한 국제적 비난(미국의 주도하는 '한국 문제의 국제화')이 증폭된다. 70년대 후반 박정권은 이러한 국내적 도전과 국제적 비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핵무기 개발 및 국내적인 '민족주의'적 정서의 조장(해프닝으로 끝났으나 예컨대 축구용어나 야구용어를 전부 한글로 바꾸는 조치 등)으로 대응하고 했으나, 끝내 민중적 저항으로 붕괴하게 된다(조희연 편, {한국사회운동사}, 한울, 1990, 74쪽). 물론 이것은 연구가설에 지나지 않으나, 한미관계의 공생과 균열에 대한 거시적인 흐름을 시사해준다.

첫 번째 소시기와 두 번째 소시기 사이의 시기에 국가보안법, 반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 하의 특별조치 등으로 인하여 검거되거나 정치활동이 규제된 인원은 61년에 294명, 63년에 427명, 64년에 208명, 65년에 297명이 되며, 61년 정치활동 정화법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규제된 인원은 3033명에 이른다(김태일, 「권위주의 체제 등장원인에 관한 사례 연구」, 최장집 편, 『한국자본주의와 국가』, 한울, 1985, 61쪽). 이는 박정권이 초기부터 각종 극도로 억압적인 성격을 지니고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세번째 소시기는 한일협정 이후 68년까지에 이르는 시기이다. 한일협정 체결을 통한 한미일 유착구조의 구축과 그로 인한 대외적 관계의 안정화, 월남파병으로 인한 냉전적·반공적 의식의 확대 강화, 통일혁명당과 같은 대규모 지하당의 노출과 북한의 대남 무력노선의 대두로 인한 한국사회 내 반공적 위기의식의 강화에 따라 독재적 통치체제의 제도적 공고화가 급속하게 추진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박정희 군부정권이 대중의 정치적 진출과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의 활성화를 공세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절차를 구축해 나가게 된다. 언론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을 제약하기 위한 시도(예컨대 '학원안정법' 제정시도 등), 1968년 초의 향토 예비군 창설, 1968년 4월 대학군사훈련교육 실시방침, 1968년 12월 국민교육헌장 선포 및 반공

교육의 강화 등이다. 또한 이러한 공세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여러 좌익 사건들을 연이어 발표하게 된다. 1967년 7월 동백림사건 및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1968년 8월의 통일혁명당 사건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공세적인 반공노선은 역으로 북한의 강경노선을 부추기게 되고, 이것이 상호작용하면서 60년대 중반 이후 이 땅에는 극우반공적 대결주의가 팽배하게 된다. 67년 5월 대남사업 총국장에 허봉학이 임명되면서 무장계릴라 침투시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68년 초의 '무장계릴라 청와대 침입사건' 과 68년 11월의 '울진·삼척지구 무장계릴라 침입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군부정권은 '안보위기'를 조성하며 반공·냉전의식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게 된다.

다음 네번째 소시기에는 박정희 군부정권이 이전 소시기에 조성되고 강화시켜온 대결적 반공주의를 배경으로 하여, 장기집권 음모를 노골화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특별히 중요성을 갖는데, 박정권이 공세적으로 3선개헌 등 장기집권 시도를 하게 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투쟁이 전개되면서, 박정권이 유신체제라고 하는 극단적인 '전체주의'체제로 나아가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박정희 정권은 대외적으로는 월남파병으로 미국이 자신의 장기집권을 추인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적극 이용하고, 국내적으로는 극우반공적 대결주의 분위기를 증폭·활용하면서 1인 장기집권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장기집권 음모가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응하여 저항운동도 점차 전국민화되어가게 된다.

68년 경 좌익사건의 출현 및 무장계릴라 사건 및 월남파병 등으로 냉전적 분위기가 보다 고조됨으로써 사회의 정치적 분위기는 극도로 위축되게 되는데, 박정권을 이를 증폭·활용하면서 69년에 들어서면서 군부정권의 3선개헌 및 장기집권 시도를 노골화하게 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박정권의 3선개헌 시도는 그러한 극우반공적 대결주의에 의해 억압되고 있던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면서 반독재 운동이 강화되는 조건이 된다. 그간 냉전이데올로기의 격화로 인해 반독재투쟁이 주로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던 상태에서 점차 반독재투쟁이 전국민적인 투쟁이 되어가게 된다. 즉 60년대 초중반까지에 있어 대학생에 국한되어 있던 반정부운동이 사회 각 영역, 계층으로 확산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소시기는 반파시즘 운동의 대중적 전개에 출발점적 성격을 갖는다.

이 네번째 소시기의 출발점은 박정권의 3선개헌 음모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정권은 69년을 들어서면서 부터는 박정희가 3선개헌의 음모를 노골화하게 된다. 69년 8월 7일 대통령의 3선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박정희 정권은 야당과 국민, 심지어 공화당 일부세력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3선개헌안을 관철시키게 되고,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온갖 부정을 무릅쓰고 3선에 성공하게 된다.

이러한 박정권의 장기집권화는 그에 대응하는 저항운동의 고양을 가져오게 된다. 이 소시기에 있어서의 반파시즘 민주화운동의 고양을 계기지우는 제반의 투쟁들은 먼저 69년 3선개헌반대투쟁을 시발로 하여 71년 부정선거반대투쟁과 '교련반대투쟁' 및 '학원자유수호운동' 등을 들 수 있

다. 69년 3선개헌 반대투쟁으로부터 촉발된 학생과 정치인, 재야인사들의 저항은 71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박정권은 71년 10월 15일 위수령까지 발동하여 이를 저지하고자 하였으나, 사태는 진정되지 않았다. 60년대 말 및 70년대 초반을 넘어서면서, 박정권의 장기집권에 대한 저항은 범국민적인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박정권에 대항하여 정치적 저항은 박정희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경제성장 자체가 경제적 위기를 동반하면서, 더욱 폭발적인 것으로 발전되어가게 된다. 60년대 경제성장이 동반한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 정부의 막강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었던 기업들의 부실화 등으로 인하여 박정권에 대한 정치적 저항은 보다 확산되고 강도를 더해갔다.

이러한 투쟁의 고양을 보여주는 사회 각 영역에서의 권리획득 및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 시기에 일어났던 주요사건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1970년 4월 8일 와우아파트 붕괴사건, 71년 6월 국립의료원 인턴 파업, 71년 7월 사법부 파동, 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 사건, 71년 8월 서울대 교수 및 지방 국립대 교수들의 '자주선언', 71년 9월 서울대부속병원 등 종합병원 인턴·레지던트의 파업, 71년 9월 15일 파월노동자 KAL빌딩 습격사건 등이다)이 고양되어 가면서 군사정권의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어 가게 된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종속적 자본축적의 위기 및 동북아에서의 냉전구조의 이완으로 인한 이데올로기적 위기 등이 결합되면서 60년대 지배체제는 위기국면으로 치달아 가게 된다. 특히 외자에 의해 건설된 수출산업 분야의 많은 기업들이 수출부진과 유가인상·금리상환 압박·경영부실 등으로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종속적 자본축적의 경제적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 더하여 닉슨 독트린 및 미·중국관계의 개선 등 동북아 구조의 전반적 개편이 결과한 기존 냉전 반공이데올로기의 이완현상은 한국의 지배체제의 위기를 보다 증폭시키고 있었다. 이상의 위기들이 결합되면서 총괄적으로 유신체제 직전의 군부권위주의정권의 위기가 출현하게 된다.

이러한 박정희 정권이 위기에 처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그간 군부통치 하에서 위축되어 있던 사회운동이 활성화되고, 그 반영으로서 공개적인 저항조직이 출현하게 된다. 71년 4월 21일 '민주수호국민협의회'의 건설은 그것의 한 표현이다(그 무렵 半합법적인 공개기구로는 '민주수호청년협의회(71년 4월 21일 결성)', '민주수호전국청년학생총연맹'(71년 4월 14일 결성), '민주수호기독교청년협의회'(71년 4월 20일 결성)가 있다. 이 4개의 단체들은 공동으로 71년 4월 27일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선전활동 및 부정선거규탄투쟁을 전개하였다(70년대의 재야공개기구는 71년 4월의 '민주수호국민협의회', 74년 11월 민주회복국민회의' 79년 3월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 순으로 변화해간다).

한편 이 소시기에 일어난 주요사건으로서 전태일 분신사건(1970년 11월 13일) 등을 들 수 있는데, 그것들을 계기로 하여 단순히 장기집권 음모에 저항하는 '정치적' 저항운동에서 민중생존권 투쟁으로서의 민중운동적 성격이 강화되어가게 된다. 이것은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의 중요한 성격 변화의 계기가 된다. 이것들은 60년대 이후 진행된 종속적 자본주의화로 인해 표면화되기 시작한

자본주의적 계급모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들의 발생 후 그것의 사회문제화 과정에서 70년대의 민주화운동에는 새로운 질적 성격이 부여되어 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반군부독재 민주화운동은 그것이 단순히 군사정권을 민간정부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군사정권이 재생산기계의 일부로 되는 자본주의적 계급모순에 대응하는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 소시기의 후반에는 위와 같은 반독재 투쟁전선의 가시화와 함께, 60년대 이후의 종속적 자본주의화의 축적구조가 위기를 맞게 되면서, 지배체제 전반의 위기를 맞게 되고, 이에 대한 지배층의 '반동적' 대안이 유신체제가 되는 것이다.

■ 1970년대 정치변동과 저항

72년부터 79년까지의 시기는 이른바 유신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본질적으로 60년대와 같이 군부권위주의정권이라고 할 수 있으나, 종속적 자본주의의 재생산 방식 및 군부파시즘의 통치양식에 일정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70년대 정치체제는 종속적 자본주의화의 진전으로 인한 계급적 모순의 심화와 군부통치의 장기화에 따른 정치적 위기의 만성화에 따라 물리적 강압력이 일상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60년대와는 질적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60년대까지는 군부통치의 적극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환상이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반공 냉전이데올로기에 의한 국민들의 '환상적(imaginary) 동의(cosent)'가 그래도 군사정권의 존재기반을 완전하게 박탈하지는 않았으나, 60년대말 이후 70년대 초를 경과하면서 군사정권의 반민주적 본질이 대중적으로 노정되고 반공 냉전이데올로기가 부분적으로 이완됨에 따라 이제는 물리적 강압을 전면적이고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 박정권에 대한 저항이 전국민적인 수준으로 발전되어 가면서, 박정권은 자신의 퇴진을 포함한 정치적 민주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더욱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의 저항을 억압하는 길로 나아갈 것인가하는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유신체제는 바로 후자를 향한 박정희와 그 추종세력들의 명백한 '선택'이었으며, 이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아니었다.

유신체제를 지탱한 것은 중앙정보부와 보안사, 정보경찰과 같은 정보기관, 군대와 전투경찰 같은 물리적, 법원과 경찰과 같은 사법기관이었다. 여기서 물론 핵심적인 기구는 중앙정보부와 친위군부였다. 이러한 국가적 폭력기구의 엄호를 받으면서 박정희와 그 소수의 친위그룹들은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집권당과 국회, 야당 까지 통제하였으며, 공작정치와 밀실정치가 한국정치를 지배하게 만들었다. 김대중의 일본 망명과 납치 살해 시도, 장준하 선생의 살해, 김영삼의 국회 제명 등은 유신시대의 공작정치의 실상을 증언하여 주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유신체제의 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70년대의 전반적인 정치경제적 상황을 점검하여 보자. 주지하다시피 60년대 이후 일부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오던 수출지향적 산업화는 60

년대 말—70년대 초에 이르면 여러가지 자본축적 상의 내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도입외자에 대한 원리급 상환압박이 나타나고 미국, 일본과의 수직적 국제분업의 형성에 따른 중간재, 자본재 수입수요가 급증하며, 사적 자본의 취약한 축적 기초 하에서의 국가의 광범한 특혜적 지원과 그것이 야기한 무분별한 과잉투자, 과잉시설, 정치자금, 기타 불생산적인 용도로의 자금 유용(사채, 부동산 투기) 등이 나타남으로써, 60년대 군부정권 주도 하의 경제성장은 심대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더구나 60년까지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자신에게 멀지않아 돌아오리라는 기대감으로 생존권 투쟁이 분출 즉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되지 않았다. 동시에 자본가들의 축적의 최대의 버팀목이었던 노동자들의 저임금, 농민들의 저곡가라는 희생이 노동자들과 농민에 의해 감내되고 있었다. 그러나 70년대에 오면서 이러한 '권위주의적' 경제성장의 '심리적' 기초도 변화하기 시작한다. 70년 초부터 표출되기 시작한 민중들의 저항은 다음의 사건들로 첨예하게 표출되게 된다. 70년 11월의 전태일 분신사건, 광주대단지 도시빈민 폭동사건, 한진상사 파월기술자의 체불임금요구투쟁 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그나마 60년대까지는 정부의 막강한 특혜와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독점자본의 부실이 전면화되지 않았으나, 70년대 초 이후 부실이 전면화되게 되고, 성장 자체의 기초가 위협받게 된다. 성장에 대한 '정치적' 저항의 부재라는 '호(好)조건'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자본축적은 이제 저항의 활성화로 인하여 경제적 부실에 정치적 저항이라는 도전이 결합되면서 더욱 불안정하게 된다.

70년대 초 심대한 체제적 위기에 직면하였던 3공화국은 유신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폭력적인 방식'의 위기타개책을 현실화시키게 된다. 그것이 바로 유신체제이다. 유신체제는 전무후무(前無後無)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폭력적 권력 이외에는 정권 유지의 기반이 부재하였던 취약한 정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유신체제는 군부정권을 보다 폭력적·강압적 형태로 재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는 종속적 독점자본의 축적위기, 60년대 고도축적 과정의 모순에 의해 촉발되어 나오는 기층민중의 생존권투쟁, 군부통치의 장기화에 대응하는 반(反)독재 민주화운동의 고양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의 만성화, 동북아에서의 국제적 냉전구조의 해체로 인한 반공이데올로기 상의 위기가 중첩되어 나타남으로써 체제의 위기가 필연화된 데 기인하는 것이었다.

유신체제는 그나마 60년대까지 일정하게 존재하고 있던 민주주의적 형식성과 절차성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이 억압적 국가기구를 보강하며, 이를 통해 점차 고양되어가는 민중적 저항을 억압하는 '초강압적 군부정권'이라는 성격을 띄고 있었다. 특히 억압적 국가기구의 강화는 노동자들의 운동을 보장하는 법, 기구의 개편 등이 중심이 되게 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1970. 1. 1),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국영기업체 등에서의 단체행동의 규제(1971. 12. 27), 1973년의 노동관계법의 개정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억압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정한 도약국면에 돌입한 저항이 잠재화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이러한 초강경책이 아니면 유지될 수 없는 정도로 유신체제의 정치적 모순은

폭발적 상황에 진입하고 있었다. 사실 70년대 중후반 긴급조치 9호 시기는 국민들의 높아진 저항적 잠재력과 그것을 충족할 수 있는 체제의 통치용량 간의 괴리가 극대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처럼 초강경 탄압방식이 아니면 유지될 수 없는 정치적 상황, 지배체제와 국민들의 정치적 대결이 어떠한 새로운 해결양식이 도입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는 정치경제적 상황이 바로 70년대 중후반의 상황이었다.

유신시대는 크게 2개의 소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의 소시기는 유신체제의 성립부터 긴급조치 제9호가 발동되는 시기(1975년 5월)까지이며, 둘째의 소시기는 긴급조치 제9호의 발동부터 1979년 10·26까지의 시기를 가리킨다. 이 두 소시기는 반파시즘 민주화운동의 고양수준 및 그에 대응하는 억압의 강화수준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의 소시기는 첫째에 비해 민주화운동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투쟁수준이 점증(漸增)됨에 따라 박정희정권의 고조되고 그를 저지하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억압이 보다 강화되었으나 물리적·제도적 억압만으로 유지될 수 없는 유신체제의 종말을 보게 되는 시기이다.

먼저 첫째의 소시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70년대 초반 위기에 처하였던 박정권은 72년 초 남북대화를 진행하고 이것을 명분으로 10월 유신을 감행하게 된다.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였고 정당활동이 금지되었으며 비상국무회의가 전권을 장악했다.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의 임기가 6년으로 늘어났으며 중임제한은 없어졌고 대통령 선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체육관 선거로 대체되게 된다. 또한 대통령은 긴급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의원의 13을 임명할 수 있는 무소불능의 권력을 갖게 된다. 바로 이 유신헌법에 의해 박정희는 1972년 12월 23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된다. 이로써 유신체제라 불리는 '제4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 10월 유신 후 박정권은 사회운동 및 재야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감행하게 되며, 보다 강도높은 억압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유신체제는 단순히 정치적 억압체제라는 성격만 지니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동시에 60년대의 성장과 자본축적의 위기를 만회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이용한 전면적인 기업지원정책을 구사하고, 60년대 식의 노동집약적 경공업 중심의 산업화를 자본·기술집약적인 중화학공업화로 상승시키기 위하여 일부 대자본들에게 엄청난 특혜와 지원을 쏟아부었던 시기였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정권 바로 직전 72년 8월 3일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긴급명령 제15호' 이른바 '8.3 비상조치'를 발표한다. 이는 당시까지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부채를 정부에 신고하고, 이를 이자율 1.3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전환시키는 한편 기업을 위한 2천억원의 특별 금융채권을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한편 법인세와 소득세의 투자공제율을 6%에서 10%로 인상하는 조세특혜를 제공하였다. 이는 60년대 수출지원이라는 명분으로 기업에 주어졌던 엄청난 특혜를 받으면서 성장해온 기업들이 그것도 모자라 파산상태에 직면하게 되자 이제 새롭게 상상을 초월하는 '초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조치였다.

나아가 박정희 정권은 73년 5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실질적으로 대통

령의 직속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화학기획단'을 두었다. 중화학공업 전략분야로 철강, 화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부문이 선정되고 73년부터 81년까지 총 2조 9천8백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웠다. 74년에는 '국민투자기금법'을 제정하여 중화학공업에의 집중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의 집행은 국회를 의결과 심의조차 필요하지 않은 초법적인 특혜적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이러한 특혜적 지원을 이용하여 재벌들은 앞다투어 중화학공업화 분야로 진출하였고 몸집불리기에 나섰다. 중화학공업 분야는 투자자본액이 거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재벌들은 이를 이용하여 거대대자본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호기로 삼았다(이러한 재벌들의 무분별한 중화학공업 투자가 70년대 말과 80년대 초 중화학공업 분야의 과잉중복투자와 그로 인한 재벌들의 위기를 낳는다. 이러한 재벌들의 위기는 다시 전두환 정권에 의해 한국은행 특별 구제금융 등 새로운 특혜에 의해 보전되게 된다). 이 점에서 유신체제는 정치적 위기에 처한 박정희 정권과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독점대자본으로 상승하려는 재벌의 이해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체제이기도 하였다(Kim, Eun Mee, Big Business, Strong State : Collusion and Conflict in South Korean Development, 1960-1990, NY : State University of NY, 1997). 그런 점에서 타락한 독재정권과 타락한 재벌의 유착으로 특징지워지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유신체제의 중요한 하나의 특징은 조직적으로 안보위기의식을 증폭하여 정권 유지를 도모하였다는 것이다. 정치적 정당성이 부재하고 경제성장마저 위기에 처하게 되는 70년대의 시점에서 박정권은 안보위기의식에 자신들의 최후의 의지처를 삼았던 것이다.

10월 유신 이후, 한국의 사회운동은 일시적인 잠복기에 들어가게 된다. 10월유신 후 군부세력은 유신 이전부터 진행시켜 온 장기집권을 위한 제도적 정치작업을 보다 고도화하게 된다.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군부통치세력에 대해 국민들이 갖는 민족적·민주적 환상이 거의 붕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작업은 주로 반공·냉전의식을 증폭시키고 그에 따라 자신의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즉 "북괴의 남침위협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유신체제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였다(물론 유신체제는 이러한 방어적 논리뿐만 아니라 '통일을 위한 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前向的' 명분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남침위협을 감각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체제는 반공·냉전의식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경주하게 된다.

유신전의 정치적 위기를 극단적인 억압조치를 통해 미봉하고자 하였던 박정권은 출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였고, 박정희가 측근에 의해 살해되는 순간까지 끝없는 도전에 직면하여야 했다. 1973년 8월 8일 백주대낮에 이루어진 김대중 납치사건은 유신체제의 조야한 폭력성을 국제사회에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후 1973년 10월 2일 서울대학교 문리대에서의 시위를 출발점으로 하여, 72년 국가비상사태선포 이후 일시적 잠복상태에 있었던 민주화운동 및 학생운동은 다시 가열되기 시작하였다. 학생운동, 야당과 재야지식인의 투쟁은 반유신민주화운동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가기 시작하였는데, 그 일차적인 구호는 '유신헌법 철폐 및 개헌'이었다. 이러한 요구를 전면내 내건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73년 12월부터 전개되어 나가게 되고, 74년 1월에는 서명인원이 30만 명을 돌파하게 된다. 이처럼 반(反)유신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자, 군사정부는 서명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조치 제1호를 발동하게 된다. 이어서 군사정부는 반유신운동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및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2차 인혁당) 사건'을 발표한다.

70년대 전반은 유신체제 직후의 잠복기를 제외하고는 - - 비록 낮은 수준에서이지만 - -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고양되고 그것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어 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화운동의 발전에 대응하여 유신체제는 74년 8월 15일 봄 월남 패망으로 인한 국민들의 반공적 위기의식 고양을 주요한 계기로 삼아 스스로를 보다 강고한 탄압체제로 전화시키고자 하였다. 바로 그 집약적인 표현이 '긴급조치 제9호'의 선포이다. 유신세력들은 이 법을 통해 정부에 비판적인 일체의 언행에 대해 구속·투옥 등 가혹한 탄압을 일상적으로 가하였고, 또한 노동현장에서의 낮은 수준의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경찰력의 즉각적 투입을 통해 연행·구속을 무차별적으로 행하였다. 긴급조치 9호의 선포를 계기로 유신시대는 제2소시기로 진입하게 된다.

유신체제의 탄압상은, 월남이 공산화되는 75년 전반기에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함으로써 그 정점에 이르게 된다. 긴급조치 9호시대는 정부에 비판적인 일체의 언행에 대하여 구속, 투옥 등 가혹한 탄압을 일상적으로 가하는 시대였고, 노동현장에서의 임금인상투쟁 등에 대하여서도 경찰력의 즉각적인 투입을 통하여 연행구속을 무차별적으로 행하는 시대였다.

여기서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을 새삼 다시 기억하여 보자. 1975년 공포된 긴급조치 9호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었다.

1.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도서·음반 등 표현물에 의한 헌법의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기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를 금한다.
2.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를 금한다.
3. 주무장관은 이 조치의 위반자, 범행 당시 소속학교, 단체와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소속임직원, 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 주무장관은 이 조치의 위반자에 대해 학생의 경우 휴업·휴교·제적 등과, 신문·방송·통신의 경우 정간·폐간 등, 그리고 사업체나 단체의 경우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이 조치 또는 주무장관의 조치를 위반하나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일반법원에서 심판한다.
6. 국방부장관은 서울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다.

7. 이 조치에 의한 주무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처럼 길게 긴급조치 9호를 인용하는 것은 이것을 한번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철저하게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사법적 권리가 부정되는 법이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헌법에 대하여 국민이 아무런 이의제기도 할 수 없게 만든 법, 주무장관의 명령 하나면 그가 속한 단체나 공동체에서 반정부사범을 철저하게 고립배제억압할 수 있는 법, 그나마 이에 저항하는 행위가 언론매체에 일체 등장하지도 못하게 하는 법, 그 조치의 사법적 적법성이 검토될 수조차 없게 만든 법, 바로 그 법이, 아니 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긴급조치 9호였다. 그야말로 박정희와 그 추종자 집단들이 온국민의 손과 발, 입을 이 '법도 아닌 법'으로 송두리째 묶었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1995년 MBC TV에서 '근대사법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행한 여론조사에서 현직판사 35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는 민청학련 사건, 긴급조치 사건 등 유신당시 판결들을 가장 '수치스런 판결'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런 법이 아닌 법으로 판결해야했던 판사들이 이제 뒤늦게나마 그러한 판결을 수치스럽게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유신시대의 제2기라고 할 수 있는 70년대 후반은 현대사에 있어 전무후무(前無後無)한 탄압의 시대였으나,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운동은 각계각층으로 확산되어 나갔으며, 그에 따른 각 부문의 저항조직도 형성되어 나갔다. 긴급조치로 인해 수많은 제적생, 해직교수, 해직언론인, 해고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들 중 많은 인사들이 연행, 구속, 투옥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유신에 저항하는 재야민주화운동단체들도 속속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75년 3월 '동아, 조선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의 결성을 포함하여, '해직교수협의회'(77년 12월)가,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민주청년인권협의회'(78년 5월, 후에 민주청년협의회로 개편된다), '구속자가족협의회(후에 '양심수가족협의회'로 개칭된다)'가 각각 결성되었다. 이러한 제반의 민주화운동조직들이 결성됨으로써 보다 조직적인 반유신(反維新)운동이 정착되어가게 된다.

기층운동 분야에 있어서도 60년대까지의 침체상태를 벗어남으로써 일정한 고양을 보게 된다. 60년대 이후의 산업화가 저임금-저곡가체제에 의하여 기층민중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는 체제였던 바, 60년대까지는 이러한 생존권적 요구 자체를 용공적인 것으로 탄압하였으나 70년대에 오면서 이러한 탄압을 뚫고 생존권적 투쟁이 광범하게 전개되게 되며, 선도적인 투쟁사례들도 많이 생겨나게 된다. 노동운동 분야에 있어서도 청계피복노동조합, 동일방직 노동조합, 반도상사 노동조합, YH노동조합 등 각종민주노동조합들이 결성과 불굴의 투쟁은 70년대 노동운동의 활성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당시의 민주노조들의 요구 및 투쟁의 수준은 크게 보아 '경제투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의 유신체제하에서는 그러한 낮은 수준의 경제투쟁마저도 불법화하고 투쟁 발발 직후 국가권력의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다. 농민운동도 72년에 만들어진 카톨릭농민회, 78년에 결성된 기독교농민회, 크리스찬 아카데미 등 재야종교단

체의 측면지원을 받으면서 그 생존권적 투쟁을 발전시켜 간다. 오원춘 사건, 함평고구마 투쟁사건 등은 전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투쟁이며, 이 외에도 농협강제출자거부투쟁, 경지정리 피해보상투쟁 등 각종의 투쟁이 전개되었다. 70년대의 농민운동 역시 당시의 유신체제의 폭압적 탄압 때문에 종교 특히 기독교의 지원을 받으면서 낮은 수준의 생존권 옹호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는 정치투쟁으로 발전되어 나오게 된다.

유신시대가 얼마나 노동자와 농민 등 민중에게 '암흑의 시대'였는가 하는 것은 몇가지 사건을 예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농민들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76년 말의 '함평고구마 사건', 79년 5월 오원춘 사건, 노동자들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청계피복노동조합, 동일방직노동조합, 콘트롤 데이터노동조합, 반도상사 노동조합, YH노동조합 등에 대한 탄압, 이러한 탄압과정에서 발생한 76년 2월의 '방림방직 사건', 76년 4월의 '인선사 유령노조사건' 78년 2월의 '동일방직 오물사건', 77년 9월의 청계피복노동자 투쟁 등은 긴급조치 9호 하의 민중운동에 대한 박정권의 탄압이 얼마나 강도있게 전개되었는가를 말하여 준다.

유신체제는 이처럼 생존권투쟁을 반정부투쟁으로 간주하여 극단의 탄압을 자행했던, 그래서 민중들의 생존권 투쟁마저도 곧 정치적 투쟁으로 전환되는 비(非)탄력적인 억압체제였고, 바로 이러한 결과로서 노동현장의 분규가 정치권의 문제로 전환됨으로써 유신체제의 붕괴의 한 요인을 이룬 것이 바로 YH사건이다.

전후 운동사 속에서 그 발전속도가 가장 빨랐던 학생운동의 경우, 70년대에는 그 이념적 심화가 더욱 진전되고 전업적(專業的)인 학생운동활동가를 배출하면서 반유신정치투쟁의 일선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 나가게 된다. 유신이 성립한 이후에 학생운동은 반유신투쟁의 주력부대로서 대규모 반정부투쟁을 수행하게 된다. 유신정권이 남발한 긴급조치들은 진보적 성향을 갖는 학생운동세력을 학원으로 배제함으로써 학생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로서 이루어졌으나, 학생운동인들이 광범하게 투옥되고 학원으로부터 추방됨으로써 70년대 후반 이후 각계각층의 재야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인적 기초로 작용하게 된다. 긴급조치가 발효된 이후, 학원에서의 광범한 반정부투쟁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으나, 일정하게 학내 기반을 확보한 학생운동이 78년 경부터 가두(街頭)투쟁으로 나아감으로써 일반대중이 반독재 가두투쟁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며, 반유신의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여기서 7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의 발전과정에서 기독교운동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는 점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당시 합법적 공간이 부재하였기 때문에, 그나마 합법적 활동공간이 존재하고 있었던 교회와 기독교운동은 운동의 '숨통을 트게 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이 확산되는 데 있어 중요한 촉발매개역할을 하였다. 예컨대 종로 5가 기독교회관에서의 목요기도회는 민주노동조합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의 모든 이슈가 집중되는 중심적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유신체제는 성직자마저도 자신의 신앙적 고백의 차원에서 저항운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었던 폭압의 체제이자 민중적인 고통의 시대였다.

박정희 정권의 종말을 상징하는 10. 26 사건은 이제 전국민적인 저항의 대상이 되어버린 한 독재자가 바로 최측근(最側近)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었다. 김재규와 차지철로 대표되는 권력 핵심부의 온건파와 강경파의 대립과, 그 온건파에 의한 박정희의 시해는 비록 '궁중쿠데타'에 의해 감행되는 형태로 나타났으나, 독재자가 측근에 의해 살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부산·마산 민주항쟁과 같은 형태로 표출된 바로 박정희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 바로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1079년 10월 26일 박정희의 죽음은 '절대권력은 절대로 망한다'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새삼 확인하여 주고 있다.

1940년대 일제의 혹독한 탄압의 시기와 비견되는 군부독재정권의 말기적 탄압의 시기였던 유신시대, 1972년 10월 17일부터 박정희가 비운의 종말을 맞게 되는 79년 10월 26일까지의 유신시대는 회상하기조차 증오스러운 어둠의 시대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재의 추악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되새기기 위해서 또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서 언제나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역사적 교훈의 시대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연도	주요 사건	비고
1972	10월 17일 유신 선포	유신체제 시작
1973	1월 21일 긴급조치 10호 발효	노동운동 탄압
1974	3월 15일 긴급조치 9호 발효	노동운동 탄압
1975	10월 26일 박정희 사망	유신체제 종말
1976	2월 2일 방림방직 사건	노동운동 탄압
1976	4월 인선사 유령노조 사건	노동운동 탄압
1977	9월 9일 청계피복노동자 투쟁	노동운동 탄압
1978	2월 2일 동일방직 오물사건	노동운동 탄압
1979	10월 26일 박정희 사망	유신체제 종말

이 글의 전체적인 논지는 다음의 표로 개관할 수 있다.

<표 1> 박정희 시대의 시기구분과 지배와 저항의 변동

대시기 구분	소시기구분	지배와 탄압	저항
61년 5. 16 군 사 쿠 데 타-10월 유 신 붕괴 (1972)	제1 소시기 5. 16 쿠데타 - 민정이양	헌법의 중지와 국가혁명위원회의 설치. 민주공화당 창당과 창당자금 마련을 위한 각종 부패사건(증권파동, 빠짱코 사건 등 4대 의혹사건), 중앙정보부의 창설, 민주세력, 민족통일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61. 11. 박정희 일본, 미국 방문. 62. 12. 개헌안 국민투표. 63. 3. 16. 군정 연장 발표. 63. 10. 15 박정희 당선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사회운동의 능동적 투쟁이 억제되었음. 민정이양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의 갈등. 학생운동의 '방황과 모색'.
	제2 소시기 민정이양 - 한일협정 투쟁	한일협정을 통한 산업화 자금 마련 시도. 64년 한일회담의 추진과, 65년 한일협정 체결 추진, 64년 8월 14일 1차 인혁당 사건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통해 박정권의 '민족적' 민주주의의 허구성의 대중적 인식. 한일회담의 굴욕적 진행으로 국민적 공분 촉발됨. 64년과 65년 한일회담 및 한일협정 반대투쟁. '민족적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
	제3 소시기 한일협정 - 68년	미국의 요구 수용 및 파병의 경제적 효과에 기대하는 월남 파병. 대일청구권 자금 및 차관의 산업자금화. 수출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67년 대선에서의 각종 부정, 65년부터 월남에의 국군 파병. 68. 1. 23.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68. 11. 16. 울진·삼척 공비침투.	66년 9월 삼성 사카린 밀수 정치문제화. 학생운동의 학원자유, 밀수규탄 시위. 67년 5월 대선, 6월 총선 이후 부정선거 반대투쟁. 67. 7. 8. 동백림 사건 발표. 67. 7. 11.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 발표. 68년 통일혁명당 사건.
	제4 소시기 69년 3선개헌 발의 - 72년 10월 유신	3선개헌을 통한 장기집권 시도. 재야저항운동 및 국민들의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구축. '학원안정법' 제정시도, 1968년 초의 향토예비군 창설, 1968년 4월 대학군사훈련교육 실시방침, 1968년 12월 국민교육헌장 선포 및 반공교육의 강화. 71년 10월 15일 위수령. 1970년 4월 8일 와우아파트 붕괴사건,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1970. 1. 1),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1971. 12. 27) 등 노동운동의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3선개헌 시도에서 드러난 박정권이 반민주적 성격에 대한 투쟁의 국민화. 반민주적 제도화와 물리적 강권을 동원한 통치로 더욱더 경직되어감. 그에 반대하는 투쟁의 격화. 69년 3선개헌반대투쟁 시발. 유신 전의 다양한 사회적 투쟁의 출현. 정치적 위기와 경제적 위기의 결합. 71년 부정선거반대투쟁과 '교련반대투쟁' 및 '학원자유수호운동'. 71년 6월 국립의료원 인턴 파업, 71년 7월 사법부 파동, 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 사건, 71년 8월 서울대 교수 및 지방 국립대 교수들의 '자주선언', 71년 9월 서울대부속병원 등 종합병원 인턴·레지던트의 파업, 71년 9월 15일 파월노동자 KAL빌딩 습격사건. 71년 11월 13일 전태일 분신사건 71년 4월 21일 '민주수호국민협의회'(낮은 수준의 재야 연합운동의 시발).



박정희 실정사적

1. 박정희와 친일문제 전명혁
2. 박정희와 변절·배반 전명혁
3. 박정희와 독재문제 조현연
4. 박정희와 부패문제 오유석
5. 박정희와 노동자·민중수탈 김동춘

1. 박정희와 친일문제

‘일본인보다 더 일본적인’ 조선인
-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高木正雄)

전 명 혁

민주회운동자료관(추) 자료실장, 역사학

박정희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취임했을 때 일본정계는 환호성을 질렀다.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육군사관학교 출신인 박정희에 대해 일본정계는 동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는 1961년 11월 11일 일본을 순방한 자리에서 일본육군사관학교 시절 교장 나구모 류이치(南雲忠一)를 초대하여 ‘스승의 나라’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였다. 나구모는 “다가키 생도는 태생은 조선일지 몰라도 천황폐하에 바치는 충성심이라는 점에서 그는 보통의 일본인보다 훨씬 일본인다운 데가 있다”가 박정희의 육사시절을 회고했다.

1. 문경보통학교 교사에서 만주군관학교 생도로

1937년 3월 대구사범을 졸업한 박정희는 20세의 나이에 문경공립보통학교 교사로 부임하게 된다. 소년시절부터 군인을 동경하던 박정희에게 초등학교 교사는 그리 탐탁치 않은 직업이었다.

이 무렵 일본제국주의는 중국침략을 본격화하면서 조선에 대해 전시 체제를 강화하였다. 「황국 신민화」교육의 철저화가 요구되었고 1938년 3월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여 일제는 “충량(忠良)한 황국신민을 육성하는 데 힘쓸 것”과 조선어를 정규교과목에서 제외하고 선택과목으로 하고 일본어를 국어로 상용(常用)케 하였다.

박정희는 교사로 부임하여 매일 아침 6시에 기상하면 트럼펫을 불었다. 하루는 교장인 아리마(有馬)가 “나는 그다지 세세히 따지는 성격은 아니지만 아직 잠들어 있는 사람이 많은 시간에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행동이 지나치지 않나?”라고 묻자 “이 긴박한 시국에 게으르게 잠이나 자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침부터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만 합니다”라고 대

답하여 오히려 교장을 당황케 했다고 한다. (하신기, 『박정희 - 알려지지 않은 그의 사상과 생애』, 세경사, 1997)

박정희의 교사 3년의 생활은 일본제국주의의 정책에 순종하는 평범한 생활이었다. 당시 보통학교 교사의 초봉은 월 45원이었고 일본인 교사의 2/3였다고 한다. 그런데 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문경보통학교에 수업시찰온 데라도(寺戶) 시학(視學 : 지금의 장학사)이 박정희의 머리가 길다고 지적하면서 "아직도 총력정신이 결여된 교사가 있다. 이것은 황민화 정책이 철저하지 못한 증거이다"라고 은근히 박정희를 비판했다. 그날 밤 아리마 교장 집에서 시학을 위한 술자리에서 다시 박정희의 머리문제를 거론하였다. 술에 취한 박정희는 언쟁을 벌이다가 술잔을 던지는 소란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사건을 겪은 후 박정희는 교장에게 사표를 던지고 대구사범때 그가 존경했던 교련주임이었던 아리마와(有川) 대좌가 있는 만주군관학교를 택하게 된다.

이 시기 식민지 조선의 많은 양심적 지식인들은 민족독립과 해방을 위해 상해, 만주, 연해주 등지에서 일제와 투쟁을 하던 시기였다. 박정희는 민족해방운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제가 민족해방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친일적인 주구들을 양성하는 만주군관학교에 스스로 입교하였던 것이다.



〈사진 1〉 박정희가 1942년 3월 만주군관학교에서 졸업생 대표로 답사하는 장면

2. "사쿠라처럼 훌륭하게 죽겠습니다"

1931년 일본제국주의는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만주를 점령하였다. 1932년 3월 일본 관동군은 만주제국을 세우고 청의 마지막 황제 부의(溥儀)를 앉히고 1939년 수도新京(新京 : 현 長春)에 신경군관학교(통칭 同德臺)를 세웠다.

신경군관학교는 봉천(지금의 심양)에 있던 봉천군관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정규 4년과정의 군관학교였다. 박정희는 1940년 봄 동덕대 제2기 신입생으로 입교하였다. 박정희와 같은 2기생은 강창선(姜昌善) 김묵(金默) 김원기(金元起) 김재풍(金在豊) 안영길(安永吉) 이병위(李丙胃) 이상진(李尙鎭) 이섭준(李燮俊) 이재기(李再起) 이한림(李翰林) 등이었다. 이 동덕대 출신은 압도적으로 함경도 출신이 다수를 점하고 있었고 또한 봉천군관학교 출신인 정일권의 영향으로 만주

용정 광명중학 동창들이 대거 신경군관학교에 입교하기도 했다고 한다.

대구사범학교를 꼴찌로 졸업한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것은 군관학교가 매우 그의 적성에 맞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42년 3월 박정희는 중군인과 한군인 생도 240명 가운데 군관학교 예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만주국 황제 부의로부터 금시계를 받았다. 그는 졸업생대표로서 재학생의 송사에 답하여 답사로 일본 천황과 일제의 만주귀뢰국 황제 부의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것과 "대동아 공영권을 이룩하기 위한 성전(聖戰)에서 나는 목숨을 바쳐 사쿠라와 같이 훌륭하게 죽겠습니다"라는 선서를 하였다.

그후 만주군에서 6개월간 근무하고 그는 마침내 그가 염원하던 일본육사 3학년(57기생)에 편입되어 이한림, 김재풍, 이섭준 등과 더불어 동경으로 출발하게 된다. 박정희의 일본 육사 편입은 당시 만주계 및 조선인 생도 중에서 성적이 좋은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일종의 특전이었다. 일본 육사의 교육은 만주군관학교보다 더욱 혹독했다. 박정희의 일본 육사 생활 역시 만주군관학교에서의 생활과 별로 다르지 않아, 여전히 그는 모범적이었다. 이러한 그를 보고 육사 교장이었던 나구모 슈이치(南雲忠一) 장군은 "다가키 생도는 태생은 조선일지 몰라도 천황폐하에 바치는 충성심이라는 점에서 그는 보통의 일본인보다 훨씬 일본인다운 데가 있다"고 생도들을 모아놓고 말할 정도였다.

일본 육사 시절 그는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한다. 말도 없고 표현도 없었으며, 속에 무언가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비추어졌다. 그렇지만 그는 1936년 일본 청년장교들이 쿠데타를 시도했다 실패로 돌아간 2·26사건에 관해서는 매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여하튼 만주와 일본의 사관학교 생활에 박정희가 만족했던 것만은 틀림없다. 그가 사관학교 생활에 열심이었던 것은 자신이 원했던 군인이 되기 위해서였으리라. 그러나 사관학교 시절 그가 말없이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만들어 나갔던 꿈은 무엇이었을까? '사무라이 정신'으로 무장한 군인으로서 목숨을 걸고 시도해 볼 만한 그 무엇을 꿈꾸고 있지 않았을까? 일본 청년장교들의 2·26쿠데타 기도에 대한 관심은 그의 그러한 생각의 반영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1944년 4월 박정희는 일본 육사를 졸업했다. 졸업성적은 3등, 조선인으로는 유일하게 일본교육총감상을 받았다.

3. 해방과 박정희의 '독립운동'

저널리스트 이상우는 『신동아』1987년 10월호에 게재한 「박정희, 그 '컴플렉스의 정치학」에서 다음과 같이 이 시기를 서술하고 있다.

박정희가 육사를 졸업하고 일본군장교로 임관된 다음 처음 배치된 곳은 일본의 마쓰야마(松山) 제14연대였다. 그러나 곧 만주국 보병 제8연대의 소대장으로 임명되어 목단강 아래 있는 영안으로 파견되었다. 이곳은 일찍이 노령 신한촌에 웅거하던 항일독립운동가들이 서진할 때의 요충으로서 한인 농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박정희는 얼마 안되어 이곳으로부터 화북지방의 열하성으로 이동배치되어 일본 복지나파견군의 열하보병 제8단에 배속되었다. 열하지구는 만주와 중국대륙을 잇는 군사적 요충지로서 일본군에 대한 항일세력의 저항이 끊임없었던 곳이다. 항일세력의 중심을 중국공산당의 팔로군이었으나 당시 동북지구성과 화북일대에서 일본군에 항거한 세력은 이밖에도 여러갈래가 있었다.

국민당 정부의 국부군관 군벌군, 독립적인 항일유격군, 심지어는 만주일대의 비적들까지도 일본군과 싸웠다. 주력은 중국인이었으나 조선인의 항일조직도 만만치 않았다. 한인들은 임시정부의 광복군, 연안의 조선의용군 혹은 독립된 게릴라부대로서 때로는 단독으로 또 때로는 국부군이나 중공군과 함께 항일유격전을 벌였다. 조직의 구성과 이념은 달랐지만 당시 조선인 항일부대의 목표는 우선 한가지, 일본에 대한 무력항쟁과 조국의 광복이었다.

박정희가 일본군장교로서 싸운 항일세력이란 이런 것이었다. 식민지민족의 비극이기도 하겠지만 그가 속해 있던 일본군이 소탕의 대상으로 삼았던 항일세력 속에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이역에서 피흘린 동족의 청년들이 있었다.…… 당시 일본군으로 끌려간 조선인 학병이나 징용군 가운데서는 일본군으로부터 탈주하여 항일군에 가담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
1945년 8월 종전과 함께 박정희는 주둔지인 화북지방에서 무장해체를 당했다. 그 자신은 일본이 연합군에게 패배하리라고 예견했다지만 그가 소속했던 일본군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고 말자 그의 처지는 마치 끈 떨어진 연과 같은 것이 되고 말았다. 일본을 출세의 발판으로 삼았던 박정희에게 있어서는 일본의 패망은 조국의 해방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으로 해석됐다.

종전 10여일 후에 박정희는 같은 만군소속이었던 이주일 신현준 등과 함께 북방으로 흘러들어갔다. 마침 광복군 제3연대에서 일제소속 한일들을 모집하고 있던 터라 주저없이 여기에 들어갔다. 46년 6월 제3연대가 천진에서 미군 LST선편으로 귀국할때까지 10개월간 박정희의 광복군 생활에 관해서도 별로 알려진 바는 없다.

또 성공회대 정해구교수는 『청산하지 못한역사』에서 박정희의 독립운동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일제의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육사를 나와 만주군에 몸담았던 그가 독립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 논란이 되는 첫 번째 문제는 일제 패망 직전 그가 여운형(呂運亨)의 건국동맹과 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운형의 건국동맹과 연결된 만주 군관학교 출신 박승환(朴承煥)이 만주군에 군적을 둔 조선 출신 장교를 상당수 규

합, 만주 일대에 산재한 독립전하의 연계를 도모하고 인근 주재 부대와 통합하여 1개 사단의 병력으로 국내 진공을 계획하였고, 바로 이 국내 진공 계획에 박정희도 참여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해방 3년사〉 1, 26쪽).

만주의 박승환과 연계를 지니고 있었던 여운형이 일제의 패망을 앞두고 연안의 무정(武亭) 및 만주의 박승환으로 하여금 유격대를 조직, 국내 진공 계획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박승환이 만주에서 어느 정도 조선인 장교들을 규합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박정희가 가담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다음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박정희가 광복군의 비밀공작원이었다는 주장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박정희는 '철석(鐵石)부대' 예하에 배속되어 만리장성 남방 평곡(平谷)에서 중공의 팔로군과 싸우고 있던 만주군 제7단에 소속되어 있었고, 중국 동부의 각 전선에 배치되어 조선인 장병들을 대상으로 귀순 공작을 벌이고 있던 광복군 제3지대의 공작원이 이 7단에 침투하여 박정희 중위 및 신현준(申鉉俊) 대위와 접촉, 이들을 광복군의 비밀 요원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이다(〈육사졸업생〉, 25~26쪽.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듯하다.

육사졸업 후 소만 국경 지대인 치치하얼(齊齊哈爾)에 있는 관동군 635부대에서 3개월 동안 사관 견습을 받은 박정희는 1944년 7월경 만주군 보병 제8단에 배치되어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그 부대에 있었다. 만주군 제8단이 주둔하고 있던 곳도 만리장성 북쪽 변경 산악지역인 열하성 홍릉현의 반백산이었다. 당시 3천여 명의 만주족 및 한(漢)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8단은 그곳에서 팔로군을 토벌하고 있었고 박정희는 그곳에서 단장의 부관으로 있었던 것이다(〈다큐멘터리 박정희〉 2, 45~47쪽.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박정희가 광복군의 비밀공작원이란 주장도 근거가 빈약하다.

박정희는 만주군 제8단에서 일제의 패망을 맞았다. 박정희를 비롯하여 신현준 대위, 이주일(李周一) 중위, 방원철 중위 등 제8단에 같이 있었던 4명의 조선인 장교들은 어제까지 같은 부대의 동료들이었던 중국인 장교들에 의해 무장해체되었다. 박정희로서는 오랫동안 절치부심하며 쌓아왔던 노력이 하루아침에 허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 남은 길은 극도로 혼란스러운 그곳에서 벗어나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이들은 제8단과 헤어져 북경을 향했다. 8월 29일 북경에 도착한 이들은 조선인 동포가 경영한다는 덕경루(德慶樓)라는 음식점을 찾았다. 이미 그곳에는 학병으로 끌려갔던 청년들과 만주 일대를 배회하던 동포들이 모여 있었다. 이들은 북경 동북쪽에 있는 북신구(北新區)라는 제지공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공장은 모여든 조선인 병사들로 인해 순식간에 병영처럼 되었다. 이곳에 이들의 숙영지를 마련해 준 동북판사처장 최용덕(崔用德) 장군은 이들 4백여 명을 김학규(金學奎) 지대장이 지휘하는 광복군 제3지대에 편입시켰다. 최장군은 중국 공군 소장으로 장개석의 전용기를 조종했던 사람이었다.

광복군 제3지대 제1대대로 불리게 된 이 부대에서 신현준은 대대장, 이주일은 1중대장, 박정희는 2중대장, 학병 출신인 윤영구(尹映九)는 제3중대장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말이 광복군이었지 일제의 만주군에 근무했던 그들로서는 쑥스러운 일이었다. 사실 그것은 광복군이러기보다 고향에 돌아오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귀향대였던 것이다.

2. 박정희와 변절·배반

박정희, 변절과 배반으로 얼룩진 삶

전 명 혁

민주회운동자료관(추) 자료실장, 역사학

1. 남로당 명단을 폭로하고 살아남다

1944년 7월 만주군 보병 제8단에 배치되어 팔로군을 토벌하던 박정희, 신현준 등 조선인장교는 1945년 해방을 맞이하자 북경에 가서 김학규 지대장이 지휘하는 광복군 제3지대에 편입된다. 일제의 만주군에 근무했던 그들은 고향에 돌아올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광복군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1946년 5월 미군이 제공한 LST를 타고 부산에 도착한 박정희는 그해 9월 조선경비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후 제2기에 입학한다. 1946년 12월 경비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는 소위로 임관되어 춘천 제8연대에 배치되고 얼마후 1947년 9월 조선경비사관학교 중대장으로 옮기게 되었다.

경비사관학교 근무중 박정희는 1948년 11월 11일 여순봉기이후 숙군작업을 벌이던 군수사당 국에 의해 체포되었다. 죄목은 남로당의 비밀당원이라는 것이었다. 그가 남로당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은 1946년 대구 10월인민항쟁 당시 죽은 형 박상희와 관련이 있었다.

1946년 9월 총파업에 뒤이은 10월 초, 대구와 경북지역은 인민항쟁의 불길 속에 휩싸였다. 일제때부터 신간회 등 항일운동을 해왔고 당시 선산군 민전사무국장 겸 인민위원회 내정부장을 역임했던 박상희 역시 군중들과 더불어 구미경찰서를 공격했고 서장 이하 서원 16명을 유치장에 감금했다. 그러나 10월 6일 진압군이 들이닥치지 도주하던 박상희는 경찰의 총을 맞아 숨지게 되었다. 어렸을때부터 박정희가 가장 따랐던 형의 죽음은 그가 남로당에 입당하게 된 동기를 부여하였다.

박정희의 사상경력에 관한 자료는 20년 가까운 금기 기간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이 유실되었다. 1948년 여순반란 직후에 있었던 숙군(肅軍) 관계자료 가운데 박정희에 대한 군법회의 기록이 포함되어 있는 제1차 숙군공판기록은 완전히 결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있는 기록문건은 당시의 사정을 보도한 신문이다. 『경향신문』 『조선일보』 1949년 2월 17일자와 『서울신문』 1949년 2월 18일자가 당시의 군법회의 결과를 보도했는데 『서울신문』의 경우 관계기사부분의 지면이 절단되고 없다.

한편 박정희 독재에 투쟁하다가 결국 의문사 당했던 장준하(張俊河)가 박정희를 만났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백기완 선생은 「장준하와 박정희」(역사문제연구소편, 『한국현대사의 라이벌』, 역사비평사, 1992)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장준하 선생이 박정희를 처음 만난 것은 중국에서였습니다. 장준하 선생이 독립군 대위로 있을 때 일본군 중위로 있던 박정희가 무장해제를 당한 후 피난민 대열에 끼어 있다가도 망쳤 독립군 군대로 자원해 들어왔답니다. 처음에는 일본군 출신인 줄 모르고 독립군에서 받아들였다고 해요. 당시는 훈련도 잘 안되어 있고 이른바 신상기록이라는 것도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넓은 중국땅에서 젊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일본놈에 항쟁하겠다고 나서니까, 덮어놓고 좋거니 하고 받아들였겠지요. 박정희가 군대에 대해서 뭘 좀 아니까 그 사람한테 중대장인가를 맡겼대요. 그런데 장준하 선생이 보니까 전형적인 일본식 군대방침을 독립군에게 그대로 강요하더라는 겁니다. 장준하 선생이 그 광경을 보고 억겨워서 “넌 뭐야” 하고는 반말로 욕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와서는 경례를 딱 붙이더라요. 하도 화가 나서 아무 생각없이 모자를 획 벗겨서 땅에다 밟고는 “너는 독립군 모자를 쓸 자격이 없어. 독립군 훈련을 일본식으로 해?” 하고 막 야단을 쳤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푹 꺾고서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일본말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깜짝 놀라서 상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일본군대 출신들이 피난민 대열에 끼어 있다가 광복군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일본군의 밀정일지 모르니 전부 제거하자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때는 육군대위의 안을 받아들일 만큼 지휘체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일본이 곧 망할 거라는 흥분에 빠져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박정희는 독립운동은 커녕 종전후 일본군이 무장해제되자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해 광복군에 들어갔다가 그 편으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전한 국군을 건설하고자 국방부에서는 특히 작년 7월 반란사건 이래 장교를 비롯하여 병사에 이르기까지 1천여명을 검거하여 취조중에 있던 중 조사가 끝난 자들은 지난 8일부터 군법회의에 회부중이었는데 지난 13일까지 판결언도를 받은 자는 73명에 달하고 있는 바 그중 前 馬山15연대장 최남근(崔楠根)은 총살언도를 받았으며 그의 김학휴, 조병건, 박정희, 배명중 등은 무기징역언도를 받고 기타는 15년부터 5년까지 징역판결이 있었다 한다”
(『경향신문』1949년 2월 17일)

< 『뉴욕타임즈』의 버너드 칼보 기자 보도 >

“5·16쿠데타 직후 백악관에서 소집된 안보회의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란된 문제는 박정희와 김종필의 사상적인 백그라운드에 관한 것이었다. 「알렌 델레스」 CIA국장이 서울 지부로부터 접수한 정보를 보고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서울 현지에서 보내온 가장 최근의 정보국 메모에는 그 당시 육군OO 부대로 알려진 정보 연구소장 L소장이 서울 현지의 미 정보기관에 제공한 것으로서 박정희와 김종필이 과거 공산주의 활동에 관련되었다는 내용이였다. 얼마후 군사정부당국은 문제의 L소장을 체포해 버렸는데 이 때문에 워싱턴 당국은 쿠데타의 성격에 관한 의구심을 더욱 버리지 못했다.”

< 『시카고 데일리 뉴스』의 카이스 비치 기자 보도 >

“박정희는 과거 남로당의 군사부장이었으며, 1948년 10월 여순반란사건을 계획하여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 당시 소수장교들의 감형운동이 주효하여 군에 복귀되었다.”

< 『타임』지, 1961년 5월 26일 >

“박소장은 전에 공인된 공산주의자였다. 그는 군반란(여순반란사건)을 조직하는 데 협력했다. 그래서 그는 이승만씨의 장교들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전향하여 반란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형을 면제받았다. 그는 지금 분명히 강력한 반공주의자이다.”

일제때 독립운동가를 잡아들이던 김창룡이 이승만정권하에서 특무대장으로 활약하면서 이무렵 대대적인 군내의 좌익을 색출하는 숙군사업이 벌어졌다. 전군의 5% 정도인 4천 7백여명의 군인들이 처벌을 받았고 그중 수백명이 총살 또는 징역에 처해졌다.

그러나 숙군과정에서 박정희는 무기징역을 언도받았지만 군내의 남로당 조직명단을 순순히 털어놓았고 이를 통해 군내 남로당 조직원이 다수 적발되었던 것이다. 그는 그의 동료들을 배신함으로써 자신의 생존을 도모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는 당시 육군내의 만군인맥(백선엽, 정일권, 원용덕 등)의 도움을 받았다.

2. 5·16 쿠데타와 장도영제거

1962년 1월 10일 오전 10시, 혁명재판소 1호 법정엔 ‘장도영일파 반혁명사건’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혁명재판소 제1심판부 재판장 고영보 공군대령의 판결문 낭독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장도영(張都暎) 등 이회영(李晦榮)을 각 사형에, 피고인 문재준 등 박치옥을 각 무기징역에, 피고인 안용학 등 이회영 등 송찬호 등 방자명을 각 징역 15년에...”

이들이 체포될 때(61년 7월 2일) 육군중장 장도영은 내각수반 겸 최고회의의장, 육군대령 이회영은 내각수반 비서실장, 육군대령 문재준은 최고위원 겸 헌병감, 육군대령 박치옥은 최고위원, 육군대령 안용학은 최고회의의장 비서실장, 육군준장 송찬호는 최고회의 문교사회위원장, 육군중령 방자명은 제15범죄수사대장 등 쟁쟁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

장도영 문재준 박치옥 등은 5·16쿠데타의 1등 공신이었다. 그런 1등공신들이 쿠데타 48일만에 ‘반혁명’이라는 죄명으로 오랏줄에 묶였고 사형, 무기징역 등의 최고형을 언도받았던 것이다. (이영신, 『장도영실각, 육사5기와 8기의 갈등』, 『신동아』1984년 5월호)

박정희는 5·16군사쿠데타 직후에 당시 육군참모총장 장도영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냈다.

존경하는 참모총장각하

각하의 충성스러운 육군은 금 16일 3시를 기하여 해공군 및 해병대와 더불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쫓겨하였습니다.

각하의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단독 거사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백척간풍에 놓인 국가민족을 구하고 명일의 번영을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오직 이 길 하나밖에 없다는 확고부동한 신념과 민족적인 사명감에 일철하여 결사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택한 이 방법이 조국과 겨레에 반역이 되는 결과가 된다면 우리들은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전원 자결하기를 맹세합니다.

각하께서는 저희들의 우국지성을 忖度하시고 쾌히 승낙하시고 동조하시와 나오셔서 이 역사적인 민족과업을 수행하는 시기에 영도자로서 진두에서 지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희들은 총장각하를 중심으로 굳건히 단결하여 민족사적 사명완수에 신명을 바칠 것을 다시한번 맹세합니다. 소관이 직접 각하를 찾아뵈워야 하오나 부대를 지휘중이므로 부득이 동료들을 특파하게 되었아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餘不備再拜

5월 16일

소장 박정희

박정희는 숙군사건 이후 문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정보국장이었던 장도영의 도움으로 소령으로 복직 전투정보과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과 장도영은 그에게 은인이었던 것이다. 박정희는 쿠데타가 성공하자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었던 군의 대선배인 장도영과 동료들을 배신하고 이들을 감옥에 처넣어버렸다.

3. 5·16이후 민정참여 불참선언후 1달만에 뒤집다

저널리스트 이상우는 「박정희는 用人的 천재였다」(『신동아』, 1984년 9월호)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62년 말부터 63년 4월까지 걸쳐 박정희는 얼핏 걸로 보기에 휘청거리는 듯하면서도 사실은 당초 예정된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치밀히 계산된 통치술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었다. 공화당사전조직에 대한 주체세력내 비주류의 반발, 끈질긴 원대복귀 요구, 4대의혹 등 각종 부정사건에 대한 비난, 야당세력의 일제 포문, 미국측의 압력 등이 겹쳐 63년 초는 박정희에게 있어 최대의 위기였다.

그해 2월 18일, 박정희는 모든 것에 싫증을 낸 듯 민정참여포기를 선언했다. 그리고는 27일 서울 한복판 시민회관(현세종문화회관) 무대 위에 최고위원, 각군 참모총장, 재야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그 자리에서 엄숙히 선서했다.

“본인은 오늘 혁명정부가 당초 기도했던 ‘세대의 교체’라는 정치목표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음을 솔직히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루한 타성적 정치의식을 일소하고 참신한 정치적 새 기풍의 조성을 위하여 정치세대의 교체는 절실한 한국의 정치적 요청임을 직감한 혁명정부는 정신적으로는 국민운동을 통한 인간개조로 제도적으로는 정당법과 정정법으로써 새로운 정치활동의 질서를 수립하고 새 인물의 등장을 기하여 새로운 정치풍토를 마련할 세대의 교체를 기하겠다는 것이 바로 혁명정부의 정치적 목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혁명정부의 노력은 이 나라 대다수 정치인들의 완고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어 일대 정치적 난국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오늘 이와같이 정부계획의 후퇴와 양보로써 이 정국을 수습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본인은 지난번 제안에서 밝힌 바 있는, 본인의 지킬 바를 여기에 다시 천명합니다. 본인은 민정에 참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국민들은 한번도 정치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랬기 때문에 박정희가 손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닦았을 때, 통치권자의 순수한 인간성에 접하는 것 같아, 일종의 감동까지

지도 느꼈었다. 적어도 그때는 박정희가 한달도 못되어 서약을 뒤집으리라고 누구도 상상을 못했다.

2·27선서 후 “정계가 혼란해지면 방관하지 않겠다”고 표명한 3월 7일 박정희의 원주발언과 3월 11일 군일부 쿠데타음모에 의한 金東河 朴林恒 朴蒼岩 등의 검거발표, 3월 15일 수도경비사 소속 장병 약 80명이 최고회의 앞마당에서 군정연장을 요구했던 창군 이래의 첫 군인데모, 4년간의 군정연장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3·16성명, 같은 날 있었던 「비상사태수습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공포, 3월 22일 국군비상지휘관 회의에 참석했던 고급장교들이 3·16성명지지를 결의한 다음 별편을 단 쫓차를 타고 대낮에 헤드라이트를 휘황하게 켜며 청와대까지 세종로 큰길을 천천히 시위행진하던일, 4월 8일 국민투표를 9월까지 보류한다는 4·8성명, 그 후 박정희의 민정참여성명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스케줄이 거의 박정희 자신의 머리속에서 구상되어 피력되어 나간 것이었다. (이상우, 274쪽)

1963년 8월 30일 박정희는 민정참여를 위한 의식의 하나로 중부전선 제5군단 기지에서 예편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나같은 불행한 군인이 다시 없기를 바란다”면서 눈물을 닦았다. 이 눈물은 15년간에 걸친 군인생활에의 결별이라는 감회와 민간인으로서 조국에의봉사라는 세리프와 더불어 그의 민정참여 불가피론을 클로즈업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었다.

눈물로써 약속한 2·27민정불참선서는 그후의 변전결과를 놓고 볼 때 좋게 말해서 하나의 해프닝이요 나쁘게 이야기 하자면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연극이었다.

일본 『讀賣新聞』(1961년 3월 18일자)는 박정희의 치밀한 정치술수를 다음과 같이 감탄해 했다.

“박최고회의의장이 대통령 불출마를 서약한 이래 한국의 민정인관은 확실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랬던 것이 3월 11일에 김동하씨를 포함하는 ‘쿠데타계획’이라는 것이 발각되었다.

15일에는 장병 80명이 군정연장을 요구하는 데모를 벌였다. 그동안 이미 ‘망명’중에 있는 박씨의 한쪽팔인 김종필씨가 의혹사건에 무관하다는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16일 박의장의 군정 4년연장안이 성명됐다. 이 일련의 움직임을 보고 있으면 바둑의 名手가 펼치는 포석처럼 실로 정연하게 빈틈이 없다.”

4. ‘김일성의 밀사’, 황태성(黃泰成)을 형장의 이슬로

1963년 9월은 5·16쿠데타로 민주당정권이 붕괴되고 2년이 지난해였고 민정이양을 위한 대통령선거전으로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 와중에서 민주공화당 대통령후보이자 국가 재

건최고회의 의장인 박정희후보의 사상적 발자취에 의문을 표시한 민정당 윤보선후보의 발언은 대통령선거전에 커다란 파문을 던졌다. 대통령선거를 30여일 앞둔 1963년 9월24일 윤보선이 지방유세중에서 "여순반란사건의 관련자가 현 정부안에 있다. 박의장의 사상이 의심스럽다"라고 한 발언은 이른바 '사상논쟁'으로 번지면서 정국의 최대이슈가 되었다.

그러면 과연 황태성은 누구인데 당시 박정희 후보를 궁지에 몰아넣었는가?

한반도의 허리가 잘린 채 남과 북에 각각 정부가 수립된 이래 이 나라에서는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수없이 많은 북한간첩들이 검거되었다. 5·16군정이 들어선 지 얼마 되는 않은 1961년 9월에 있었던 이른바 '황태성 사건'도 그 하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시작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여느 간첩사건과는 너무나 달랐다. 대개의 경우 통상적인 간첩사건은 검거와 함께 재빨리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수사당국에 의해 공표되는 것이 상례였으며, 그 처리도 명확했다. 한마디로 간첩사건에 관한 한 당국의 태도는 단호한 것이었으며, 그 처리과정에서도 의혹의 여지가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황태성 사건만큼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당시 황태성이 간첩이 아니라 북한 고위층의 특수 임무를 띠고 남파된 밀사라는 말이 돌 정도로, 황태성이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간첩인지 아니면 밀사인인지부터가 모호했다. 결국 황태성이 처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만큼 황태성 사건은 의혹 속에서 생겨나 의혹 속에서 사라진 아주 독특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5·16 직후인 1961년 9월 박정희 최고의를 만나러 내려왔다는 황태성. 당시 군사정권은 황태성을 간첩죄로 구속해 재판을 진행하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 쉬쉬하면서 극비에 붙였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윤보선과 야당의 폭로로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져 일파만파의 충격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두 주일 후인 63년 10월 22일 황태성은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고, 판결 후 불과 52일 만인 12월 14일 인천교외에서 총살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돼 국회에 황태성사건 진상조사단이 구성돼 그가 진짜 죽었는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1993년 5월 한 주간지는 "황태성이 당시 총살되지 않고 북으로 비밀리에 송환돼 현재 압록강 수풍 발전소 부소장을 하고 있다"는 한 관광객의 목격담을 실기도 했다. 사건 발생 후 30년이 흘렀음에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관심을 끈 주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황태성이 5·16군정의 최고 당국자, 즉 박정희와 그 옛날 어떤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황태성은 박정희의 셋째 형인 박상희(朴相熙)와 절친한 친구이며, 함께 1946년 10월 인민항쟁을 주도했다가 월북하여 북한 무역상 부상까지 지낸 거물이었다.

일제 식민지시기에 김천을 드나들던 박상희는 민족통일전선체인 신간회의 같은 회원이었던 황태성과 교분을 쌓았다. 박상희는 선산의 핵심 활동가였고, 황태성은 김천지역을 맡고 있었다. 이

때의 황태성과 박상희를 만난 조영주(재일거류민단 단장 역임)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나는 그때 일본에서 리츠메이칸 대학과 교토 대학원에 다니면서 사회주의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방학 때 고향에 와서는 친구인 박상희, 황태성과 자주 어울렸습니다. 사회주의 사상이 주로 화제가 되었는데 박은 정열적이고 의분심이 강했으며 민족주의적인 데 반해서 황은 냉철하고 코스모폴리탄적이었습니다. 황은 골수 사회주의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박은 그러기에는 너무 가슴이 뜨겁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박정희는 1963년 10월 10일 유세 도중 열차 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태성과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해명하고 있다.

황태성의 나의 친형(박상희)과 친구관계다. 어려서부터 집에도 놀러 오는 사이였다. 해방 후 내가 귀국해보니 황은 이미 새빨간게 된 공산주의자로서 김천에서 위원장 노릇을 하고 있었고, 당시 나의 형은 <동아일보> 지국장을 하고 있었는데, 별로 거래가 없었던 것 같았다. 5·16이 나던 해 9, 10월경 김종필 전중앙정보부장이 찾아와서 황태성을 아는가고 물었다. 나는 그 후 그의 소식을 모르고 있었는데 김종필씨는 황이 월북해서 김일성 괴뢰정권에서 무역성 차관급까지 올라갔는데 간첩 사명을 띠고 넘어왔다가 체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황은 나를 만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중앙정보부장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하여 치안국의 한 경찰관을 중앙정보부장으로 위장케 하여 조선호텔에서 만나게 했다. 황은 그 자리에서 박의장의 형과는 옛날 친구인데 만나게 되면 남북협상을 제의하려고 왔다고 토로했다. 황이 체포된 경위는 대구에 와서 사람을 보내 형수를 만나려고 한 것을 형수가 그날 밤 상경하여 김종필씨에게 이야기해서 체포된 것이며 그 후 재판을 받아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황태성 사건에 관한 박정희의 해명 가운데서 주목되는 점은, 박정희가 황태성을 가리켜 간첩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분명히 박정희 자신은 황태성이 보통 간첩과 같은 임무를 띠고 남파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가 파악한 황태성의 임무는 남북협상에 관한 것이었다. 박정희는 간단히 '남북협상을 제의하러 왔다'고 해명했으나 사실은 이 대목이 황태성 사건의 핵심이었다. 이 점이 바로 황태성이 여느 간첩과는 다른 특수 임무를 띤 밀사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당시 북한의 5·16에 대한 태도와 오판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아가 다른 간첩에 비해 판이한 태도를 보인 군정당국의 미묘한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황태성이 당시 띠고 있던 임무의 윤곽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황태성이 처형될 때까지 1년 반동안 서대문구치소에서 함께 생활했던 비전향 장기수 김종중은 황태성의 유언을 뇌리에 간직해 왔다고 한다. 구치소에서 황태성은 그에게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 민족간의 대치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통일하자는 얘기를 하

러 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종중은 황태성 최후의 육성 증언을 이렇게 옮기고 있다.

61년 밀사 파견 문제를 둘러싸고 북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대립했었다고 합니다. 미국이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 그리고 박정희가 여순사건 후의 숙군 때 체포돼 제가 살기 위해 너무 많은 동지를 팔아 넘긴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보내더라도 절대 다치지 않을 인물을 보내야 한다고 했는데 황부상이 '내가 한 번 가보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박정희와의 회담 결과가 낙관적일) 가능성이 극히 적다는 데 동의하지만 그래도 민족적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황 부상 자신이 그 형(박상회)과 절친한 친구 사이이고 박정희 당자라도 잘 아는 처지이니 인간적으로 만나 민족적 양심에 호소한다면 어떤 돌파구라도 열리지 않을까 기대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설마 죽어야 하겠는가, 혹시 죽더라도 얼마 남지도 않은 여생, 조국에 마지막으로 봉사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황태성이 휴전선을 내려와 접촉했던 친척, 동향인,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변호를 맡았던 인사들이 들려준 내용들도 김종중의 증언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 대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남한에서 5·16이 났을 때 김일성은 5·16 주체의 과거 경력과 관련하여 어떤 가능성을 내다보고, 5·16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박정희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했다. 그래서 김일성은 남한에서 월북해온 사람들 가운데 박정희와 잘 아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지목된 사람이 황태성이었다. 김일성은 황태성에게 남한에 들어가 직접 박정희를 만나보고 통일에 대한 그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대화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도록 임무를 부여했다. 이러한 임무를 띠고 내려온 황태성은 나름대로는 어떤 사명감까지 느꼈을 가능성도 있다. 자기는 결코 간첩이 아니라는 점, 김일성의 특명을 받아 통일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해 내려온 밀사라는 점, 자기는 공산주의자라기보다는 민족주의자라는 점, 자기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남북 양쪽에서 통치권자로 있을 때, 서로 의사를 통하게 해서 통일문제를 협의해 본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해볼 만한 가치있는 일이라는 점 등등...

한편 황태성은 박정희에 대해 철저한 민족주의자라고 믿으면서 박정희와 대화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최소한 그가 남한에 들어와서 간첩으로 구속되리라고는 애초에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는 대담하게도 휴전선을 넘어 왔고, 그 옛날 동향인이나 박상회와의 친구관계에서 안면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 박정희와의 면담을 주선해 줄 것을 의뢰했다. 그는 자신이 간첩이 아니라 밀사이기 때문에, 혹시 박정희는 모르지만 김종필 정도는 만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최악의 경우 만나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지리라고 생각했다. '밀사는 만나 주지 않으려면 추방하는 것이 국제관계'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한에서의 상황은 황태성의 기대와는 전혀 판판으로 전개되었다. 황태성은 그가 기대했던 누구도 만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구속되고 말았다. 애당초부터 그를 포함한 북측은 사태 판단을 크게 잘못했던 것 같았다. 5·16쿠데타 주역의 과거 발자취를 과대평가한 점, 일국의 통치권자가 된 입장에서는 적어도 그 당시로서는 북과 흥정이나 협상을 할 수 없다는 현실논리를 깨닫아보지 못한 점, 미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상황을 감안하지 못한 점, 야당을 포함한 한국 국민의 반공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점 등이 그것이었다. 어쨌거나 황태성은 체포되어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및 간첩죄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1963년 10월 22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그 해 12월 14일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죽음을 앞둔 황태성의 심경은 어떠했을까? 김종중은 이렇게 말한다.

그 이전까지는 박정희가 내 말 들었으면 일이 잘 풀렸을텐데 하며 몹시 안타까워했었습니다. 다만 63년 무렵엔 체념하신 듯했습니다. '박정희에게 한 가닥 민족적 양심을 기대했었는데 일말의 양심도 없음을 확인했다. 결국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서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다. 이 길은 누가 걸었어도 걸어야 했을 길이다'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황태성의 죽음과 관련, 주목되는 사실은 간첩사건으로서는 드물게 검거된지 2년간이나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채 시간을 끌고 있었다는 것과, 그러다가 선거과정에서 크게 말썽이 나자 갑자기 서둘러 처형한 느낌이 짙다는 것이다. 마지막 유언을 할 때 그는 "민족완전자주독립, 남북통일만세"를 불렀다. 요란한 총성과 함께 황태성은 두 손을 활짝 뻗쳐올리면서 앞으로 푹 쓰러졌다. 이것이 황태성 사건의 종결이었다. 그렇다면 박정희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했다는 형 박상회의 절친한 친구이자 자신도 친형처럼 따랐다는 황태성을 왜 이렇게 급히 처형한 것일까. 이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좌익전력을 가진 박정희가 야당의 사상논쟁 공세를 모면하고자 개인적인 친분에도 불구하고 끝내 황태성을 처형했다는 것이다.

결국 '밀사' 황태성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의 실패는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남과 북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에 마주 앉을 기회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그의 죽음은 이 기회를 더욱 먼 후일로 미루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한편 사상논쟁은 공박과 혼란 속에서 속 시원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963년 10·15선거를 맞았다. 투표 결과는 공화당의 박정희 4백 70만 6백 42표, 민정당의 윤보선 4백 54만 6천 14표로 박정희가 당선되었다. 선거를 마친 후 박정희와 윤보선은 전화를 통해 당선 축하와 위로를 교환했고, 사상논쟁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사상논쟁의 종결과 함께 황태성과는 달리 박상회는 역사 속에서 파묻혀 버리고 말았다.

3. 박정희와 독재문제

박정희와 독재통치

- 국가폭력의 일상화와 '질식된' 민주주의

조 현 연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소 연구교수, 한국정치

이 글은 박정희와 그 추종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공포적인 독재통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폭로 해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지배의 신화가 사회를 휩싸고 있을 때 저항의 논리는 폭로적인 형태를 띠 수밖에 없으며 의미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박정희 통치 18년은 국가폭력의 일상화에 따른 총체적인 인권 유린과 민주주의 질식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박정희 통치 18년의 역사가 독재와 인권유린의 역사라는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단지 그것이 시대적으로 불가피했다는 것을 항변할 뿐이다. 즉 이들의 주장은 대체로,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여 인권과 민주를 억압한 것이 오히려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으며, 또 그것은 가난을 떨치기 위해 시대적으로 불가피한 희생이었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경제발전을 위한 독재, 즉 개발독재의 시대적 불가피성 여부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일단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 이 글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국가폭력이 일상화되고 인권이 유린되었길래, 또 도대체 얼마나 민주주의가 탄압받고 질식되었길래, 박정희 시대를 찬양하고 박정희를 숭배하는 지지자들조차도 그에 대해 부정하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점이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날까지도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우상 숭배, 이성 파괴' 집단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역사의 실제적 진실이라는 관점에서 찾아본다.

1. 군부독재의 서막, 5·16 군사쿠데타

5·16쿠데타 주역들은 민주주의와 조국근대화, 역사 발전, 명예 혁명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미화시키고 있다. 이들의 말을 먼저 들어보자. 박정희에 따르면 5·16은 "민주주의의 파괴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구명작업이자 민주정치에 대한 임상 수술"(박정희,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 동아출판사, 1962, 216)이게 된다. 또한 김종필은 5·16을 "파국 직전의 조국을 구출하고 조국 근대화의 국민적 염원을 성취하기 위한 역사적 전기의 마련"(김종필, 『새 역사의 고동』, 서문당, 1980, 69), "5·16은 역사발전의 토양이며 박 대통령은 역사를 일으킨 사람—후손들이 어느 날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 여유있는 삶의 근원을 거슬러 찾아갈 때 박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것"(1993년 5·16민족상 시상식장에서)이라고 정당화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 민주주의와 관련해 볼 때 역사적 허구일 따름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5·16은 한국 국가성격을 공개적 테러독재를 기본으로 하는 종속적 파시즘으로 바뀌었고, 이를 매개로 하여 국가의 전면적인 경제개입과 종속형태의 변화—즉, 소재 및 금융종속으로부터 금융 및 시장종속으로의 변화—와 독점의 심화를 가져다주었다.

둘째, 5·16은 직접적으로는 4·19혁명 후 복원되기 시작한 민주화운동·민주변혁운동을 또 한차례 궤멸시켰으며 재복원까지 장기간의 시간을 지연시켰다. 그리고 군의 정치참여를 향상시켰고, 억압적인 민중통제를 가속화시키면서 사회 일반을 병영화시켰고, 그에 따른 원형감옥과 같은 상호감시·자기검열체제를 확립시켰다. 반공규율사회가 제도화되고 안착되는 가운데, 박태순과 김동춘이 말하는 '감옥의 전성시대', 즉 "전국 방방곡곡 지명 수배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구두 발자국 소리들이 밤새도록 들렸으며, 쫓고 쫓기는 유랑의 무리들의 온갖 사연이 전개되었다. 바야흐로 '감옥의 전성시대'가 도래"한 것이었다.

셋째, 5·16쿠데타와 한국 민주주의의 관계 문제는 궁극적으로 5·16쿠데타를 4·19혁명의 부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의 계승으로 볼 것인가 하는 연속성과 단절성에 대한 평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5·16이 4·19의 긍정적 부정 내지 긍정적 계승 발전으로 볼 수 있는가? 물론 이 역사적 두 계기간의 관계를 그들이 각각 추구했던 정치체제적 지향, 나아가 그들이 배태 하였던 정치체제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판단한다면, 4·19가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반면, 5·16은 '독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5·16은 4·19의 부정임은 분명하다. 장준하의 말을 빌리자면 5·16은 민주주의의 정신과 내용을 복구하고 병영으로 명예롭게 복귀하기는커녕,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이비 애국혁명'으로서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것이다.

이처럼 박정희와 김종필이 거리낌없이 찬양하고 있는 5·16쿠데타와 박정희 군정의 본질은 1963년 학생들에 의해 발표된 아래의 <4월혁명 제4선언문>에도 잘 집약되어 있기도 하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를 둔 이러한 비판들에 비춰볼 때 결국 5·16쿠데타는 4월정신의 부정이자 30년간에 걸친 군부독재통치의 출발점이었던 셈으로, 사실 5·16은 단순히 장면 정권에 대한 안티 테제를 넘어서서 4·19에 대한 안티 테제였던 것이다.

<4월혁명 제4선언문>

4월! 뜨거운 피의 적이었던 백색독재와 그를 밀받침한 사회적 제 모순, 즉 사회경제적·봉건적 구조와 외세의존적·매판적 경제질서, 의식의 보수성 등 온갖 질곡은 의연히 온존된 채 4월의 정신은 왜곡되고 자기합리화의 선전물로 타락했다. 질서를 약속하며 집권한 군사정부는 무질서한 자기 분열의 노정에 당황하여 안정이라는 이름을 호도하기에 분망하며, 부를 공약한 정권이 호사한 계획의 이면에서 의혹사건을 조작하고 있다. 4월의 피의 대가인 기본적인 자유권은 헌법 책자의 지면 위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고, 입헌주의는 중대 성명주의로 대체되었다. 민족자주역량은 외국 대사관의 성명 앞에 압도당하고, 외국 정부의 망언 앞에 우롱당하고 있다. ---군사정부의 위압적이고 획일적인 피상적 개혁에의 기도는 사회적 모순을 더욱 첨예화시키고 그것의 확대재생산을 예약해 주었을 뿐이다.

한편 5·16이 4·19에 대한 반동이라는 사실은 1964년 5월 20일 김지하가 쓴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의 조사」에도 잘 드러나 있다. “나는 숨이 막혀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나는 그 이전에도 아니 그 이후에도 이것만큼 통렬하게 5·16혁명정부를 비판한 글을 읽어본 적이 없었다”는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의 소감을 낱게 할 정도로, 박정희와 그의 허울뿐인 ‘민족적 민주주의’의 치부와 실상을 신랄하게 풍자한 조사의 내용은 이러했다.

시체여! 너는 오래 전에 이미 죽었다. 죽어서 썩어가고 있었다. 넘치는 시체여. 반민족적·비민주적 민족적 민주주의여! ---시체여, 죽어서도 개악과 조어와 식언과 변의와 난동과 불안과 탄압의 명수요 천재요 거장이었다. 너 시체여! 너는 그리하여 일대의 천재요 희대의 졸작이었다. ---구악을 신악으로 개악하여 세대를 교체하고 골백번의 변의의 변의를 변의하여 권태감의 흥분으로 국민정서를 배신하고 부정불하, 부정축재, 매판자본 육성으로 ‘빠쟁꼬’에 ‘새나라’에 최루탄 등등, 주로 생활필수품만 수입하여 노동자의 언덕으로 알았던 위거힐에 화폐를 증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잡아 국민도의를 고취하고 경제를 재건할 철두철미 위대한 시체여, 해괴할수록 민족적 민주주의여! ---한없는 망설임과 변의 중잡을 수 없는 막연한 정치이념, 방향감각과 주체의식과 지도력의 상실, 이것이 곧 너의 전부다. ---백의민족이 너에게 내리는 마지막 이 새하얀 수의를 감고 떠나가거라. 너의 고향 그곳으로 돌아가거라. 안개 속으로, 시체여.

2. 공포통치의 악령과 헌정질서의 파괴

1) 유신독재의 탄생사 : 3선개헌에서 10월유신까지

박정희의 영구집권 음모의 결정판이 1972년 유신독재의 등장이라면, 그 음모가 공식적으로 가

시화된 것은 1969년의 3선개헌이었다. 박정희와 공화당에 의한 3선개헌 추진작업은 이른바 ‘중단 없는 전진의 해’인 1968년부터 본격화되어, 1969년 1월 공화당 의장서리 윤치영의 ‘3선개헌 검토 중’이라는 발언으로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단군 이래 지도자’ 운운하면서 박정희를 떠받치는 윤치영은 그로 인해 ‘단군 이래 아침꾼’이라는 비난의 화살을 받기도 했다.

이후 박정희는 야당이 자신을 독재자라고 했다는니, 야당이 정치를 못하게 한다는니 하면서, ‘대통령 신임=3선개헌 지지, 대통령 불신=3선개헌 반대’라는 등식을 들고 나왔다. 즉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였다가 이것이 부결될 경우, 그것은 곧 자신과 내각에 대한 불신임으로 보고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다분히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었다.

박정희의 야욕이 노골화되자 3선개헌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잇따랐음은 물론이다.

이런 가운데 신민당이 주도한 1969년 7월 19일의 ‘3선개헌 반대 시국대강연회’에서 김대중은 “대한민국에서 황소를 상징으로 한 공화당이 지금 미쳐가지고 국민주권을 때려잡을 3선개헌 음모를 하고 있는데, 미친 황소의 갈 길은 도살장뿐”이라고 운을 때면서, “3선개헌이 통과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조문을 장사지내는 것”이자 “박정희씨를 위하여 헌법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김영삼 또한 “우리의 많은 농민들은 과거보다 더 못살고, 다만 잘사는 사람이 있다면 박정희씨 주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일 뿐이며 박정희씨가 아닌 여기에서 있는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발전은 계속 이룩할 수 있다”, “양심을 가지고 이 개헌안에 부표를 던진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있는 한 조국과 민족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일을 한 것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하면서 3선개헌의 부당성을 공격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박정희와 공화당의 대응은 1969년 9월 14일 새벽 변칙적인 국회 날치기 통과였다. 스스로들 부끄러워 한데서도 여실히 드러나듯이 그것은 122명에 의해 불과 6분만에 이루어진 쿠데타적 폭거였다. 날치기 현장의 생생한 모습은 이러했다.

14일 2시계 야당의원들이 환하게 불이 밝혀진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농성하고 있는 동안, 칠혹같은 어둠으로 싸인 길 건너편 제3별관에는 개헌을 찬성하는 민주공화당, 정우회 및 무소속 의원들이 삼삼오오 도둑고양이 걸음으로 모여들었다. ---122명의 의원들은 개헌안에 이어 국민투표법안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이 때가 새벽 2시 45분. 엄청난 일이 순식간에 끝나자, 이들은 ‘빨리 나가라’는 당간부의 독촉소리와 함께 계단을 밀려 내려갔다. 입구에서 사진기자의 플래시가 터지자 얼굴을 손으로 가리는가 하면 벽을 향해 몸을 바를 모르는 몸짓으로 도망치듯 후문을 빠져나갔다.

한편 이른바 10월유신이라는 '공포정치'의 악령이 마침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발표된 이른바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해 서였다. 그것은, "평화적 통일의 지향과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해 구질서를 청산하고 통일을 향한 민족주체세력을 형성하며 능률을 극대화, 자주적인 총력체제의 구축을 방향으로 일대 개혁을 단행—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국무회의를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불과 1년 전에 헌법을 지키겠노라고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하였던 박정희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는 우스꽝스러운 작태를 연출하면서 헌정질서를 또다시 유린한 쿠데타를 저지른 것이었다. 박정희는 10·17 특별선언을 일본의 메이지유신을 본 떠 '10월유신'이라고 정식 명명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종필 또한 10월유신에 대해 이렇게 미화하고 있다.

근대화 초기 이후에 나타나는 이러한 사회 변화의 혼란이나 또는 파괴적 에너지를 극복하고 근대화의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영도력이나 또는 어떤 형태의 권력 집중이 불가피하게 된다. 70년대 초에 단행된 10월유신도 이러한 근대화 과정의 필요악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당시에 정부의 권력이 강화되어 구심점이 마련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사회 내부에서 일어난 혼란으로 60년대에 모처럼 시작된 근대화의 과정이 그만 중도에서 좌절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와 그 추종세력의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유신의 얼굴은 공포스럽고 추악한 괴물의 모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유신헌법은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헌법이자, 독재자 박정희가 국민에게 보내는 일종의 협박문서이기도 했다.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한 국민투표 또한 국민주권을 농락한 조작된 투표놀이로 불과했다. 삼엄한 비상계엄령 하에서, 그리고 찬성의 자유는 있되 반대할 수 있는 자유는 없는 가운데, 또 야당 참관인들의 투개표 과정 참석조차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신헌법이 11월 21일 통과됨으로써 유신체제가 공식적으로 탄생되었다. 이어 12월 23일에는 체육관 선거를 통해 유신대통령을 탄생시켰다.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의원의 전원 참석, 무효 2표, 찬성 2, 357표, 99.99%라는 자랑스런 찬성을 속에서 '한국판 히틀러'가 마침내 탄생하여, 공포와 암흑의 시대가 절정의 막을 올리게 된 것이었다.

유신독재의 탄생은 박정희와 그 추종자들의 권력욕이 빚은, 이 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퇴행시킨 역사적 죄악이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권력에의 끝없는 집착과 함께 갔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과 함께, 5·16쿠데타, 3선개헌 쿠데타에 뒤이은 민주정치의 목을 비튼 세 번째 쿠데타이자, 나아가 그것에 저항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가한 공포의 철권이었다는 사실이다.

"유신헌법을 세 번이나 읽다가 하도 화가 나서 '더러운 놈의 나라, 이것이 무슨 헌법이나. 독재하자는 것이지'하고 고함을 친" 김재규나, "박정희는 거칠 게 없는 독재자이자 총통으로

군림했다. 국회나 법원은 장식품이었고 헌법은 왕이 백성에게 내리는 서릿발같은 칙서에 불과했다. 유신으로 박정희는 사실상 박씨 왕조를 세웠다"고 말하는 김형욱. 이들은 한때나마 박정희의 총복들이었다. 이들이 말하는 유신 소감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2) 제왕적 대통령제 :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권한

서구 민주주의의 경우 대통령중심제이든 내각책임제이든 간에 한 사람 또는 한 기구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고 여러 제도에 분산되어 소위 독재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법·제도적인 측면에만 국한해서 봤을 때 제3공화국까지 우리나라의 국가권력구조는, 이러한 서구민주주의의 제도적 특성에 크게 위배되지 않은 권력의 분산을 유지해 왔다. 다시 말해서 제1공화국, 제3공화국의 대통령중심제에서도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나 사법부가 대통령의 권한을 적절하게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고, 또한 정당의 활동에 의해 그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독재의 방지를 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신체제 국가권력구조는 무엇보다 먼저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서의 대통령, 즉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유신헌법은 말만 공화제이지 전제왕권에 준한 절대권한을 대통령에게 집중시켜 3권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송두리채 와해시켰다. 즉 유신체제하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는 대통령 1인의 권력독점 현상을 방지하는 모든 제도적 장치를 해체시키고 권력을 대통령 1인에게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악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왕적 유신독재체제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유신정우회, 긴급조치 등의 제도적 장치의 고안을 통해 국가, 정치사회, 시민사회의 세 영역에서 경쟁의 범위와 수준을 대폭 축소, 제한하였다.

유신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보유하게 된 구체적인 권한을 보면 첫째,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손쉽게 개정할 수 있게 한 반면, 국회의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 즉 대통령의 경우에는 자신의 발안에 의하여 헌법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이를 발안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과 함께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국회발안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도록 만든 것이다.

둘째로, 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국회의원 정족수의 1/3을 소위 유신정우회라고 하여 대통령이 일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선출한 여당에 이들을 합류시켜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용이하게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유신정우회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직능대표적 모양새를 띠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신체제의 수호와 정당화를 위한 원내 전위대 또는 원내 행동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었다. 즉 자칭 '10월유신을 의회

정치에 구현함으로써 한국적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삼았던 유정회는 정당이나 원내교섭단체라기보다는 오히려 박정희의 의회 장악을 합법화하기 위한 친위부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마저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 양자는 제도적 주종관계를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박정희는 국정적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집행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행정부의 견제를 위한 국회의 국정감사권마저 박탈함으로써 국민주권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켰다.

셋째,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민의 위에 군림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긴급조치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았으며 국회에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아가 사법부 심사의 대상 또한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은 국가위기를 명목으로 하여 국민들의 기본권을 용이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정당·의회정치가 불구화되고 사법부가 시너화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유신시대 국가권력구조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정치엘리트간의 경쟁과 분열의 확산을 제한하고,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배제하고 위로부터의 경쟁적 요소를 제거한 것을 들 수 있다. 권력의 독점과 사인화된 권력, 특히 제왕적 유신독재체제 하에서 의회와 정당은 권력의 주변으로 밀려났으며, 급기야 불구화된 정당·의회정치가 이루어졌다. 유정회의 설립으로 인한 집권당의 과잉대표 현상과 국회의 독단적 운영, 의회의 행정부 종속현상의 심화가 정당·의회정치 불구화의 예라면, 속전속결식 재판과 '정찰제 판결'은 사법부 시너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유신독재의 특징인 통합의 빈곤과 억압의 과잉현상은 그 원인이자 동시에 결과인 측면이 적지 않다.

3) 정당·의회정치의 불구화와 통합의 빈곤

일상적 의미에서 정당이란 한편으로는 다양한 정치세력간의 경쟁이 표출, 확산되는 동시에 귀결되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이자, 이익집약(interest aggregation) 기능을 통해 사회의 갈등과 균열을 통합하는 핵심적 기제이다. 즉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모순된 사회적 이익들을 집약시켜 국가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매개하는 이익집약, 다시 말해 '시민'들 내지 '시민사회'와 국가간의 연계(linkage) 기능이 정당의 주된 기능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은 자본주의 체제의 재생산의 중요한 기제이자 헤게모니와 전략형성의 장이며 동시에 사회적 역관계가 반영되는 계급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계급투쟁 없이 정당이란 없는 것이다. 후자의 측면, 즉 계급투쟁과 정당과의 관계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정당이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관계의 전동벨트가 아니라, 오히려 계급투쟁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화 내지 구조화시킨다는 사실이다(손호철, 「다원민주주의적 정치질서와 정당」, 안희수 외 『한국정당정치론』, 나남, 1995 참조). 정상적인 정당정치란 바로 이러한 토대 위에서 정당들간에 다양한 정책을 매개로 정

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구조적 제약 속의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박정희가 지향했던 정당정치의 성격은 결코 자유로운 경쟁을 기본 속성으로 하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정당정치가 이루어지는 정치적 공간인 '정치사회'를 '국가'에 복속시키고 보수 엘리트 정당간 경쟁으로 한정시키는 가운데, 여당이 다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야당의 역할을 최소화시키는 상황을 구조화하고자 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유신체제는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에도 심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앞서 본 것처럼 유신헌법은 국회의원 정수의 1/3(유신정우회)의 선출방식을 대통령의 추천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의 일괄 찬반투표로 규정하였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중만을 중시하였던 유정회의 설립은 집권당의 과잉대표현상을 낳았다. 1973년 9대와 1978년 10대 총선에서 공화당의 유효득표율은 각각 38.7%와 31.7%에 지나지 않았지만 의석점유율은 무려 66.6%와 64.6%에 달하였다. 그리고 국회에서 집권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국회의 독단적 운영과 의회의 행정부 종속현상이 심화되었다. 유신의회는 단지 정부의 정책을 사후에 추진해주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한 들러리 국회였던 것이다. 8대까지 국무위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던 국회의원의 지위 또한 9대 국회부터 차관과 차관보의 중간급으로 격하되었다. 국회내 발언도 30분으로 제한되고,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가 금지되고, 국회담변공무원의 직급범위도 차관급에서 국장급으로 낮추는 등 '총력안보, 총화유신'이라는 행정 우위의 능률만능주의, 행정편의주의가 국회에도 적용되었던 것이다.

한편 이전 정권과는 달리 박정권 하에서는 청와대와 중앙정보부, 군이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하였고 정당과 정당정치의 중요성은 더욱 주변화되어 유명무실화되었다. 공화당의 정치적 역할을 점차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정보기구들이 대행해나갔다는 점, 이것은 그나마 존재하였던 대통령 권한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과 협상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나아가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의미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신정우회의 설립으로 대통령을 꿈꾸는 여야의 주요 정치인들의 정치적 야심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를 위해 대중적 명망성을 얻기 위한 시도들도 차츰 감추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권경쟁이나 여여 정당간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당시의 상황에서 정치적 경쟁은 극히 일부의 영역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한 예로 김종필을 차기 대통령으로 옹립하려는 과정에서 터진 1968년의 국민복지회 사건이나 당권장악을 둘러싸고 친김종필계와 반김종필계의 대립으로 분출되었던 1969년의 4·8항명파동, 1970년의 10·2 항명파동과 같은 당내 권력투쟁은 유신 시절에 더 이상 출현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결과의 불확실성이라는 선거의 기본원리를 유린한 유신체제는 당내 대안세력의 부채와 공화당의 약화를 초래하였고, 집권 공화당 내의 권력경쟁과 당내 분파의 소멸을 가져왔던 것이다(정상호, 「유산된 민주화, 경쟁의 부채와 통합의 빈곤」, 한국정치연구회 편, 『박정희를 넘어서』, 1998, 푸른숲, 125쪽 참조).

이러한 정당정치의 불구화는 경쟁자에 대한 박정희의 개인적인 통치 스타일과도 연관이 깊다고 하겠다. 박정희는 자신과 이순신을 동일시하는 논리로 군인의 이미지 제고와 암묵적인 군인통치의

합리화를 꾀함과 동시에 야당세력을 비판하기도 했다. 즉 박정희의 충무공탄신기념사 속에 드러나는 것처럼, 조선시대 '간악한 신하들'과 이순신의 관계는 오늘의 야당세력과 박정희의 관계로 역사에서 다시 부활했다. 박정희가 이순신과 마찬가지로 민족과 국가를 구하려는 '선'인 반면, 야당은 그 당대의 신하들과 마찬가지로 나라의 앞날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분열과 당쟁을 일삼는 '악'의 무리인 것이다(전재호, 「동원된 민족주의와 전통문화정책」, 한국정치연구회 편, 『박정희를 넘어서』, 푸른숲, 1998, 251-252쪽 참조).

이러한 관념 속에서 박정희는 집권기간 내내 경쟁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자신의 집권에 위협이 될만한 집단이나 인물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억누르고 짓밟고 거세시키려고 했다. 여기에는 여야의 구분이 없었다. 자신이 수족처럼 부리고 있던 여당에 대해서조차도 끝없는 경계와 불신의 눈초리를 통해, 그 속에서 경쟁적인 인물이 나타날 조짐이 보이면 가차없이 씩부터 잘라버렸다. 야당에 대한 경계와 탄압이 더욱 철저했음은 물론이다. 야당이 한낱 정치의 장식품이나 꼭두각시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는 야당도 언젠가는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최소한의 게임 룰조차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박정희에게 야당이란 존재는 최고 통치자의 뜻에 무조건 복종하거나, 아니면 사탕과 채찍을 통해 길들여져야 하는 하찮은 대상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저항하는 야당은 분열과 파괴와 거세를 위한 공작의 대상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처럼 박정희는 정치적 경쟁의 룰, 경쟁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민주정치的重要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판과 견제와 균형의 생산적인 의미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또한 그의 머리 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은 정치적 라이벌(rival)의 이미지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적과 동지의 경직된 이분법적 사고 방식 속에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적(enemy)의 이미지만이 있을 뿐이었다. 끝끝내 침묵과 굴복, 굴종의 길로 방향을 틀지 않는 비판자나 경쟁자는 적으로 간주, 레드 콤플렉스라는 공포의 붉은 색을 동원하는 등 이단자의 딱지를 붙여 거세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이런 경향은 특히 유신독재라는 정치적 암흑기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박정희 통치 18년 동안, 특히 유신독재 하에서 온전한 의미의 정치는 실종되기에 이르렀다. 협상과 타협과 양보의 정치 대신에, 협박과 매수와 거세 등 공작의 정치만이 활개를 치며 돌아다니던 시기였다. 정치와 사회영역의 건강한 견제·비판·대안세력은 백기 항복이나 전면 거부이나 사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굴복이면 '사쿠라'고, 거부면 선명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바로 이런 척박한 정치 풍토 속에서 성장한 야당의 지도자들 또한 적과 싸우다가 오히려 적을 닮아감으로써, 비생산적인 흑백논리의 덫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이른바 '3김정치'가 상징하는 부정적 이미지도 바로 이 시기에 그 역사적 연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박정희 통치 18년 동안 산출된 수많은 사쿠라 야당 정치인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명 정치인들 모두가 박정희 스스로 생산해낸 통치 결과이자 '거울 효과'라고 할 수 있었다. 그것은 민주적인 타협과 중용의 정치를 배격하고 오직 폭력과 협박에 의한 공작만을 떠나간 데 따른 당연한 반사적

귀결이었다. 특히 유신시대에 이르러 정치가 사회적 통합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논리가 판을 치는 사회의 '정글화' 현상이었다.

4) 사법부의 시너화와 '정찰제 판결'

한편 유신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정권의 시너로 완전히 전락하였는데, 그것은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이 크게 보강된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유신하의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의 임명에 있어서 제3공화국 때 있었던 법관추천회의의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보직을 명하여 징계에 의한 파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유신체제 하에서의 사법부 현황은 무엇보다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 일단 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한 재판은 속전속결식으로 이루어졌다. 한 예로 긴급조치 1호의 희생자인 장준하에 대한 재판은 검찰 기소로부터 선고에 이르기까지 불과 1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검찰관의 구형량과 재판부의 선고형량이 일치했는데,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를 '정찰제 판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 속전속결식 처리와 정찰제 판결이야말로 유신법조의 진면목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유신법조의 실상은 1976년 민주구국선언 사건의 처리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1976년 3월 1일 '박정권은 퇴진하라'는 민주구국선언 발표로 인해 윤보선과 김대중 등 많은 인사들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또다시 투옥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정은 박정희와 파시스트 독재에 대한 규탄대회장이었으며 민주주의의 강론장이기도 했다. 당시 김대중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에서 이 3·1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이렇게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1977년 김대중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3·1선언 관련자 가운데 가장 중형인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이었다.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진리는 권력이 없으면 소멸합니다. 하물며 지금 권력을 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긴급조치를 발동하고 체포·투옥하지 않으면 유지하지 못하는 진리가 도대체 얼마를 가겠습니까? 역사를 움직이고 역사를 형성한 것은 영웅도 권력자도 사상가도 아니라 바로 무수한 국민들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국민을 경애할 줄 모르고 국민을 얕본 권력자는 반드시 하느님과 역사의 징벌을 받아온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의 가장 비민주적인 정치탄압이요, 가장 졸렬한 보복행위인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우리에게 무슨 중형이 내려지건 우리들 피고인의 양심은 무죄입니다. 국민의 가슴속의 정의도 이를 무죄라고 외칠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도 무죄를 언도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상의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 신분상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제4공화국 헌법과 제3공화국 헌법을 비교해 보면 그 핵심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4공화국 헌법	제3공화국 헌법
대통령의 선임방법과 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주체국민회의 ● 6년 ● 대통령의 재임에 제한없이 ●얼마든지 재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선거 ● 4년 ●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국민투표 회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국회에 대한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정수의 1/3을 일괄추천(유신정우회) 하는 권한 ● 국회해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없음
긴급조치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은 국가의 경제, 재정, 위기, 안전보장, 공공안녕질서의 위협 등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53-1). ● 1항의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53-2). ● 국회에 통고 1항과 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없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건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의 국가의 경제, 재정, 위기, 안전보장, 공공안녕질서의 위협 등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시 최소한의 경제재성장의 처분, 또는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보위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국회의 승인이 필요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은 효력을 상실함
법관의 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 법관추천회의가 없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법원장인 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대법원판사인 대법원장이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에 있으며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대법원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헌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판한다. 1. 법률의 위헌여부 2. 탄핵 3. 정당의 해산 ● 헌법위원회 위인 9인중 3인은 국회에서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없음

선거관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9인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 3인은 대통령,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9인 중 2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 2인은 대통령, 5인은 대법원 판사회의에서 선출하는 자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헌법의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의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개정의 제안은 국회의 재적의원 1/3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국가폭력의 일상화와 인권의 총체적 실종

박정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동의와 설득에 의한 정치를 도외시켰다. 무조건 믿고 따라오라는 식이었으며, 따라오지 않는 자는 물리적 강제력으로 통제했다. 사실 박정희는 자신의 통치이념인 민족중흥, 근대화, 경제성장, 반공과 안보, 자주국방, 새마을운동의 유인력에 끌려 '중단 없는 전진'에 동참하는 자에게는 포용과 시혜를 아끼지 않았지만, 냉소적이거나 비판적 저항세력은 철저히 탄압, 배제했다. 그리하여 배제-저항-탄압의 악순환 속에서 국가폭력의 일상화 구조가 형성되었던 것이며, 그 결과는 인권의 총체적 실종으로 나타났다. 그 사례는 무수히 많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사례로 중앙정보부와 긴급조치의 피해 사례, 그리고 정치적 의문사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정권안보의 첩병 '남산'

박정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는 정보의 독점과 반대세력에 대한 사찰 및 규제 등 국내외 정치에서 실질적인 비밀경찰로서 기능하였다. 즉 인권탄압과 정치공작과 폭력통치의 선봉대이자,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박정권 전기간을 통해 중앙정보부는 핵심적인 권력기관들 중에서도 가장 방대하고 응집력있는 조직체로서 흔히 정부내의 소정부로서 활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통치 18년 동안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권력을 지키는 핵심 보루로, '한국 속의 한국'이보다 한국 위의 한국'을 형성하였으며,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부를 이루고 있었다. 김충식은 우리는 아직도 박정희 시대의 그림자에 갇혀 있다고 하면서, 한국현대정치사에서 '남산'이라고 불린 중앙정

보부의 위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김충식, 『남산의 부장들 1』, 동아일보사, 1992, 11쪽).

(중앙정보부는) 안보 파수꾼·외교주역에서부터 정치공작·선거조작·이권 배분·정치자금 징수·미행·도청·고문·납치, 문학예술의 사상 평가, 심지어 여색 관리·밀수·암살까지 그야말로 올마이티의 권력 중추였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보부의 역할에 대해 눈감은 채 박정희 시대를 말하는 것은 허구일 뿐이다.

한편 1961년 6월 10일 번갯불에 콩 볶듯이 공포된 중앙정보부법에 따라 권력 위상화의 총구가 된 중앙정보부의 다채롭고 복잡한 인적 구성에 대해 전직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이렇게 회고한 바 있다(김경재, 『김형욱 회고록 : 혁명과 이상 1』, 전예원, 1991, 235-236쪽).

중정의 직업 수사관의 전직은 사찰계 형사, 방첩부대 문관, 헌병 하사관, 심지어 일제 치하에서 설치던 조선인 헌병과 밀정 등形形色색이었다. 그 중 어떤 사람은 일제 치하에서는 일본 순사로서 독립운동가들을 때려잡다가, 한 때 공산당이 서울을 점령했던 시절에는 우익 민주인사를 때려잡다가, 나중에는 공산당 간첩을 때려잡은 '천의 얼굴'을 가진 사나이도 있었다. 그들에게 소위 이데올로기란 하나의 걸치레에 불과했다. 그들은 어떤 이데올로기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도 때리고 고문할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무정부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누구든지 중요할 수 있고, 어떤 고문술도 개발할 수 있으며, 피의자를 학대함으로써 자신을 확인하는 새디스트들이었다. -- 그들은 분명히 사회의 어두운 그늘 아래서 번성하는 독버섯, 밟혀도 다시 무섭게 살아나고, 뜨거운 태양에 말라붙었다가도 빛이 사라지면 서슴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독버섯들이었다.

남산의 공포스런 이미지는 권력연장의 축축한 습기를 제공한 지도층에 의해 입안된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이들의 맹활약에 의해 형성된 것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중앙정보부 정보반 3국과 6국은 유신 이후 야당 정치인들과 재야세력을 때려잡기로 소문난 이른바 '정치 도살장'이자 박정희의 절대명령을 실행에 옮기는 특명공작반이었다. 이들은 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조서와 각서와 진술서를 받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끌려들어간 사람들은 단지 인간이 아닌 고깃덩어리에 불과했고 입에 붙은 소리는 무조건 '빨갱이'였다. 그리고 입맛에 맞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악질'이자 '처죽여야 할 못된 놈'으로 간주되었다. 당시 '남산'의 험악한 상황에 대해 김대중의 비서였던 김옥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김옥두, 『다시, 김대중을 위하여』, 살림터, 1995, 167-168쪽).

그들은 정말 난폭했고 정신질환 속에서 헤매이는 듯 초점을 잃고 핏발이 선 눈동자는 마치 이조시대 망나니들처럼 아주 기묘하고도 동물적인 분위기를 풍겨냈다. 입에서는 끝없이 '이새끼, 이놈, 빨갱이, 저새끼, 저 악질, 저 나쁜 놈, 때려죽일 놈' 등등 욕설이 그치지 않았

다. 그들은 며칠 동안 날 걸레조각처럼 자근자근 짓밟아 놓더니 이제는 아예 포기한 듯했다. 그들은 다정하게 진물이 흐르는 상처에 약을 가져와 발라주면서 다시 회유하기 시작했다. '김대중이가 빨갱이라는 걸 써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면 국회의원 시켜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테니 제발 좀 써주라!'

2) 억압과 공포와 죽음의 시대, 헌법 위에 균림한 긴급조치

박정희 집권 동안 계엄령은 3번 선포되어 31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같은 기간 중에 위수령은 3번에 총 5개월 동안 발동되었고, 각종 비상조치가 9건에 69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이 비정상적인-아니, 박정희와 극소수의 그 광신적 추종자들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기간을 합치면 총 105개월로 박정희 집권기간인 220개월의 약 절반에 해당된다. 이처럼 박정희 통치시대는 위수령과 계엄령이 통치기간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었던 말 그대로 '억압과 공포와 죽음의 시대'였다. 그것은 아래와 같은 제반의 정치규제법에 의한 검거인원수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31쪽).

(1961-1980년 정치규제법에 의한 검거인원수)

	국가 보안법	반공법	정치활동 정화법	사회 안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긴급조치 9호	계
1961	296					1			297
1962			3, 038						3, 038
1963	102	86			239				427
1964	29	79			18				126
1966	37	84			98	3			222
1965	44	104			7	2			157
1967	44	110			4	6			164
1968	83	168			37	1			289
1969	81	323			27	1			432
1970	204	368			25				597
1971	217	276		5	49				543
1972	175	507		9	24	1			706
1973	164	260		1	37				461
1974	152	228		3	7				87
1975	74	328		1	13				420
1976	121	386			29			193	738
1977	35	322						157	515
1978	30	208			6		11	215	473
1979	57	199			2			160	414
1980	23	136	811		3		4	1	978
계	1, 968	4, 167	3, 849	19	625	15	15	726	11, 384

한편 특히 긴급조치로 상징되던 유신독재 중반기 이후는 취중언사에도 세심한 주의를 요했던 불신과 자기검열의 시대였다. 대통령 긴급조치권은 유신독재의 정수이자 꽃이었다. 실로 긴급조치는 유신독재의 상징이었고 정권 존속을 위한 무소불위의 방패였다.

물론 천재지변이나 전시와 같은 비상시에 최고통치권자에게 조건부의 긴급조치권 내지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상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은 이러한 최고 통치권자의 상례적인 비상권한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유신헌법의 대통령 긴급조치권은 사후적·진압적 비상조치뿐 아니라 사전적 예방조치까지 할 수 있고, 또 비상조치권의 내용·범위·효과가 지극히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국회나 법원에 의한 통제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말하자면 유신헌법의 긴급조치는 대통령 개인의 의지와 판단에 모든 일을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이었다.

유신헌법이 공포되고 1년 남짓 지난 1974년 1월 8일 첫 긴급조치가 발표된 이래 1979년 12월 8일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될 때까지 2, 159일 동안 이 나라 국민들은 긴급조치라는 공포의 괴물 아래서 신음해야 했다. 특히 수많은 학생·종교인·노동자·지식인·재야 정치인들이 긴급조치에 걸려 영장 없이 연행·구속되었고, 군법회의 재판에 의해 터무니없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제9호는 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긴급조치 제1호)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긴급조치 제4호) 이 조치를 위반한 자,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되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성토·농성, 그 이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처분을 받고 해당 학교는 폐교처분을 받는다.

(긴급조치 제9호)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부정적 행위를 금한다. 이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박정희 통치 시대에는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해 입만 병긋이라도 하기만 하면 누구나 그 생명을 온전히 보전할 수 없는 공포 상황의 연출 속에서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투옥되어 차디찬 감옥 속 독방에 버려졌다.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데 쓰여져야 할 국가제도와 기구들은 오로지 박정희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데 쓰여졌다. 특히 어둠의 절정인 긴급조치 9호의 시대에는 음험한 파시스트적 독재의 공포와 암흑시대의 질식의 클라이막스였다.

이 침묵과 굴종과 압제만을 존재케 한 긴급조치의 횡포를, 시인 김지하는 '1974년 1월을 죽음으로 부르자' '1974년 1월의 죽음을 두고 우리 그것을 배신이라고 부르자'라고 노래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김지하가 죽음과 배신으로 노래한 이 악명 높은 긴급조치는 어떤 배경에서 취해졌으며, 어떻게 실행되었는가?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등으로 정국이 들끓게 되자 박정희는 1973년 12월 29일 개헌서명을 중지하라는 담화문을 발표, 이어 1974년 1월 8일 오후 5시를 기해 긴급조치 제1호 및 제2호를 선포하여 일체의 개헌논의를 금지하는 한편, 이 조치 위반자를 심판하기 위한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하였다.

이어서 1974년 4월 3일에는 학원사태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선포하여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제2차 인혁당 사건'을 '공산주의자의 배후조종 속의 국가변란 기도'로 왜곡·조작해냈고, 이에 관련된 제 단체를 불법화하고 학생들의 개별적 집단행위에 의한 일체의 반체제운동을 금지시켰다. 이 사건과 관련, 수사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1, 024명이 수사대상이 되었으며, 253명이 군법회의에 송치되었다. 그리고 이 가운데 169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사형 8명, 무기징역 21명을 제외하더라도 그 외 140명의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징역형량은 도합 1, 650여년에 달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1』, 1986, 352쪽 참조). 민청학련과 이른바 제2차 인혁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박정희의 노골적인 폭력적 처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인권단체들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 실상은 이러했다.

재판은 1974년 6월 15일부터 시작되어 약 10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도예중,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등 8명은 1975년 4월 9일 대법원에서 상소가 기각된 지 20시간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집행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민청학련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맡았던 강신옥 변호사의 경우는 "애국학생들을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걸어 중형을 구형하는 것은 사법살인이다"라는 요지로 변론을 하면서, "과거 3·1운동 당시 정말 내란죄에 해당하는 때도 일본인들이 심판하면서 최고 12년에 머물렀다", "직업상 이 자리에서 변호하고 있지만 차라리 피고인들과 같이 피고인석에 앉고 싶은 심정"이라고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어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속 사실은 신문에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긴급조치 위반 사실을 허가 없이 보도하는 것 자체가 긴급조치 위반이었기 때문이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에서는 인혁당 사건의 최종판결이 확정된 1975년 4월 8일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선포했다. 미 의회에서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청문회가 1974년 하반기에만 세차례나 열렸으며,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인혁당이 민청학련을 직접 배후조종하였다는 박정희 정권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까닭에서 조작일 가능성이 큰, 아니, 정권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완전히 조작된 사건이었음이 분명하다.

먼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진상을 밝히다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여 출국당했던 제임스 시노트 신부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기 한참 전인 1974년 4월초에 댄이라는 CIA 간부로부터 "짜여진 각본대로, 공산주의자들의 음모에 관한 한국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임을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김삼웅의 경우는 "긴급조치 4호를 통해 반체제적인 학생들과 이들의 배후라고 판단한 교수, 종교인들을 일망타진하고자 한 것이 민청학련 사건과 인혁당 사건의 조작이었다. 특히 '인혁당 재건위'라는 공안 사건을 통해 학생들에게 겁을 주고, 학생 시위가 북한측의 조종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국민에게 선전하여 이를 탄압하고자 했던 것이다. - 인혁당 연루자들은 심한 고문으로 죽은 후에도 시신이 온전하게 가족에게 인수되지 못했다. 당국이 고문 사실이 폭로될까 두려워 유족의 동의 없이 화장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고문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 이들에 대한 고문과 전격 처형, 사체 화장 등의 거듭되는 잔혹성과 의혹에 대해 종교계에서 들고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기도 하다(김삼웅, 『한국현대사 바로잡기』, 가람기획, 1998, 141-142쪽).

무고한 국민의 피를 너무도 많이 흘리게 한 박정희에게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걸까? 후일 그는 정부 요인들 앞에서 "크나큰 실책이라면 인민혁명당 여덟 명을 처형한 것이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1995년 4월 25일 문화방송이 사법제도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판사 315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인민혁명당 사건 재판이 '우리나라 사법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이었다는 답변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역사의 실제적 진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진상과 법적 명예회복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민혁명당 재건위 조작사건의 무고한 희생자 가운데 한 명인 우홍선씨의 아내는 1987년 이러한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했다.

우리들의 남편들은 가족 얼굴 한 번 못 보고 아침 이슬처럼 스러져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사형당한 이후 신문에 나온 박정희 사진을 그가 죽을 때까지 이가 아프도록 꼭꼭 씹어서 뱉곤 했습니다. 남편 산소에 매주 꽃을 들고 찾아가서 하늘을 향해 '살인마 박정희 천벌을 받아라' 하고 외쳤습니다. 한 번 외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꼭 세 번씩 외쳤습니다.

지금 박정희를 우상화하면서 박정희기념관 건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살인마 박정희는 천벌을 받아라"라는 이 회한과 분노의 외침이 전혀 들리지 않는가 보다.

한편 1974년 후반기를 통해 사회 각 민주세력으로부터 전면적인 도전을 받아야 했던 유신체제는 2·15 석방조치를 통해 이 도전을 무마하고자 했으나 이 조치가 별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 없음을 인식하자 또다시 강경책을 구사하면서 전면적인 저항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부심

하였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 패망의 소식이 전해지자 박정희는 이를 이용, 관제 안보결기대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1975년 5월 13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를 선포함으로써 인권탄압을 본격화하였다.

이제 긴급조치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만 4년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된 긴급조치 9호가 만천하에 그 악명과 위세를 떨치게 된 것이다. 긴급조치 제9호의 발동은 한국사회가 전시비상체제로 돌입한 것을 의미했으며, 이 긴급조치 9호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은 말하지도 듣지도 말고 오직 '바보처럼' 살아야만 했다. 유신체제가 막을 내린 1979년 10월 26일에 이르기까지 이 조치로 인하여 투옥된 사람은 1,000여명에 달했다. 그리고 불행중 다행으로 설사 구속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이상의 신체적 위해와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격리에 시달린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1』, 1986, 665쪽).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개정 에 대한 청원 자체도 금함으로써 유신헌법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올려놓는 동시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들을 사실상 박탈하여 헌법 위에 존재하는 법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무엇이 유언비어라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국민들은 권력자의 비위에 거슬리기만 하면 언제라도 영장 없이 체포·구금될 위협에 노출되고 말았으며, 누가 그러한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되었는지조차 전해들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 조치를 위반하였다고 권력자가 판단을 내린 사람에 대하여 취해진 징계조치는 법의 심판 대상조차 되지 않음으로써 권력자는 사실상 신과 같은 절대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무지막지한 야만적인 긴급조치 제9호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공산화의 위협'이라는 단 하나의 구실 앞에서 그 구호의 허구성과 기만성을 솔직하게 비판하지 못한 채 이를 묵과함으로써 진정한 안보를 해치는 결과만을 초래하였다

이런 유신독재의 전과정에서 유권자로서의 참여의 주장은 유신헌법 수호와 공산화의 위협이라는 이름으로 거부되었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의 요구는 성장과 안보의 논리로 억압되었다. 이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아무런 사회적 안전망 없이 작동하는 약육강식·적자생존의 냉혹한 시장의 원리와, 정치적 매개나 통합장치의 공백을 대신한 공포의 긴급조치와 정보기관의 노골적인 폭력뿐이었다. 이처럼 유신체제는 단순한 국가폭력의 일상화를 넘어서 국가가 시민사회의 모든 구석구석에 침투하여 이를 통제하고 질식시키려 한 체제였다. 한 예로 이승만정권이 단순한 물리력과 조야한 반공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권위주의적 체제였다면, 박정희는 중앙정보부 등 정보기관의 항상적인 정보 활동, 사찰, 반상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곳곳에 침투하여 모든 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질식시킨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체계적'인 독재체제였다(손호철, 「박정희정권의 재평가 : 개발독재 바람직했나?」, 『현대 한국정치 : 이론과 역사』, 사회평론, 1997, 256쪽)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결국 박정희가 남겨준 유산 가운데 하나는 결국 '힘이 곧 정의'라는 권력시상주의의 논리와 반지성주의적 인권탄압의 사회화였던 것이다.

3) 정치적 의문사와 '재야 대통령' 장준하의 죽음

이 땅에는 '사인이 명백히 자연사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또 '타살당했음이 분명한 심적 및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에 의해 은폐·조작되어 사인조차 철저히 묻혀져 버린' 많은 죽음들이 있다. 즉 이 정치적 의문사의 특징은 ①타살이 아니라고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살 가능의 상당하고도 명백한 경우가 있는 것, ②죽음의 현장 또는 사건 발생의 목격자가 부재하거나 또는 목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 ③정치적 또는 사회적 배경을 이유로 해서 수사를 기피하거나 또는 수사 내용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 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 역대 반민주적·반민중적·반민족적 독재정권은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장애가 되는 인물들을 살해하고 은폐 조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불법 연행 및 고문 등으로 우연 사인과 관련한 진실 은폐 및 조작의 방법으로 성급한 강제부검, 유족 부재중 부검, 화장 강요, 일방적 가매장 후 유족에게 연락, 증거품 은닉, 시신의 변형 조작 등을 구사해 왔다. 국가 폭력을 그 본질로 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많은 정치적 의문사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첫째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다음으로 기득권 세력에 도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데 있으며, 세 번째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죽음과 죽임의 진상 규명되지 않은 채 영구미제사건으로 묻혀 버렸기 때문에 정치적 의문사가 속출해 온 것이다.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이루기 위해 분신·투신·할복 등의 방법으로 목숨을 바친 사람들과,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 오랜 운동과정에서 병을 얻거나 고문·투옥 후유증,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319명에 이른다. 이 중 노동운동과 관련한 사람이 92명, 학생운동과 관련한 사람이 60명, 빈민·노동자·군경·일반시민들이 64명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1999년 11월 5일 현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의 집계에 따르면, 이 가운데 말 그대로 '의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사례는, 유신독재 치하인 1973년 서울대 최종길 교수의 죽음에서 시작하여 1997년까지 총 44건이나 된다. 그리고 이 중 절반 정도가 정치적 의문사로 분류된다. 물론 더욱 많은 경우의 의문사가 파악되지 않은 채 묻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가운데는 '재야 대통령'이라고 불리던 장준하의 이름도 있었다. 부활에 부활을 거듭하고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독재자 박정희와는 달리, 그에 맞서 동시대를 살아왔던 장준하라는 이름 세 글자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다가온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장준하라는 인물은 무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워져 버렸을지도 모른다. 특히 20대 이하의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장준하란 사람은 어쩌면 애초부터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는 가공의 인물로 자리잡고 있는 지도 모른다.

장준하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일주명창(一柱明窓, 시대의 창을 밝히는 심지가 되라)이라는 그

의 좌우명처럼, 거짓과 억압으로 물든 시대 앞에 양심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삶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일제 식민통치를 온몸으로 거부하면서 광복군에 참여하여 항일 독립투쟁으로 몸을 일으킨 장준하는, 이승만 독재하에서는 『사상계』를 창간하여 반이승만투쟁을 전개했다. 『사상계』하면 장준하가 떠오를 정도로 『사상계』는 그의 분신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장준하는 단순히 글만을 남기는 '창백한 지식인'이 아니라 고뇌하며 행동하는 실천적 지성인의 전형이었다. 그의 반독재투쟁은 5·16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의 통치 아래서, 특히 정치적 암흑기라고 불렀던 유신독재 치하에서도 계속되다가 결국 1975년 8월 17일 '의문 아닌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다음날 전국의 각 신문들은 "장준하씨가 오후 2시 30분께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약사봉에 등산 갔다가, 하산길에 벼랑에 실족 추락해서 별세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정치적 암살인가? 아니면 정말 단순 실족사인가? 장준하는 왜 죽어야만 했는가? 중앙정보부의 계속된 협박과 경고 속에서 이루어진 장준하의 죽음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사인의 의문점을 보도한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가 긴급조치 9호의 유언비어 유포죄로 구속되고 검찰의 조사가 호지부지되었다는 점, 유족측 검시의에 대해 중앙정보부가 심한 매질을 하고 검시 내용을 발설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 것, 사고 직후 가족과 언론기자가 연락받은 시간이 차이가 나는 점 등이 그것이었다.

당시 박정희에게 장준하는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1966년 민중당 주최의 '삼성 이병철의 사카린 밀수사건'에 대한 규탄 국민대회와 연설집회에서 그는 "밀수 왕초 박정희는 물러가라"고 외침으로써 저 유명한 '밀수왕초사건'으로 인해 국가원수 모독죄로 구속, 이후 아홉 번에 걸친 감옥 행 가운데 그 첫 번째 문을 열었다. 당시 장준하는 "박정희란 사람은 우리나라 밀수 왕초다", "존슨 대통령이 방한하는 것은 박정희씨가 잘났다고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 청년의 피가 더 필요해서 오는 것이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1967년 대선 운동기간에 국가원수 모독죄로 다시 투옥된 장준하는 제7대 국회의원선거에 옥중 출마해 당선되었고, 유신이라는 정치적 어둠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1973년 12월 24일 '헌법개정 100만인 청원운동'을 발표, 박정희에게 정면 도전장을 내게 된다. 그리고 폭압적인 긴급조치 9호 아래서는 윤보선, 김대중 등과 만나 민주회복을 위한 범민주세력의 단합을 모색하기도 했다.

박정희가 '한국판 히틀러'를 꿈꾸며 종신 집권을 하는 데 대적할 만한 정적은 야당의 쌍두마차인 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재야의 강골 장준하 이 세 사람으로 압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은 이후락의 '남산'에 의한 납치사건으로, 김영삼은 청와대 회담 직후 박정희와의 정치적 밀월이라는 수수께끼 속에서 발목이 잡혀 있었다. 박정희에게 유일하게 남은 정적은 장준하 한 사람뿐이었다. 5·16쿠데타가 일어난 직후부터 줄곧 장준하는 박정희에 맞서 왔다. 한일협정 반대투쟁의 이론적 지도부로서, 그리고 박정희의 조직적인 탄압으로 인해 『사상계』가 '호황 속의 적자'로 무너져내린 뒤에는 거리의 대중집회를 통한 반독재투쟁의 맹장으로서 장준하는 전면에 나섰다. 그는 사사건건 일제치하 '오카모토'(박정희)의 친일 행적을 말하며 인간적 모멸감을 박정희에게 안겨 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친일 콤플렉스와 열등의식에서 비롯된 증오심 비슷한 어떤 것을 박정희는 갖고 있

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장준하의 급힐줄 모르는 불굴의 저항과 그에 대한 박정희의 증오심이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의문사 아닌 의문사라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닐까?

4. 개발독재, 경제성장, 민주주의

박정희 통치 18년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논쟁점 가운데 하나는 개발독재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가 맺고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산업화라는 전제조건-박정희식 민주주의 전제조건으로서의 1인당 GNP 1천 달러-이 필요하다. 나아가 산업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먼저 해야(선성장) 후에 민주주의가 가능하다(후민주화)라는 논리적 전제는 박정권의 개발독재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이처럼 '경제성장이 민주주의를 가져온다' 또는 '경제가 성장하면 할수록 정치발전이 이루어지고 민주주의에 근접한다'는 이른바 자유주의적 근대화론의 관점은 오랫동안 학계의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군림해왔고, 국민 대다수에게 아직도 최소한 수동적 동의에 따른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 자유주의적 근대화론은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사실만 지적해보자.

첫째, 이 자유주의적 낙관론은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구체적인 현실 체험 속에서, 즉 정치적 퇴행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공격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정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조적 종속은 더 심화되었으며, 나아가 정치적 소요와 혁명, 그리고 정치적 부패와 비민주적 관행 등이 증폭되어 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에서 박정희 시대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박정희 시대의 국가는 국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졌지만, 대외적으로는 철저히 종속적인 성장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이른바 '시민사회'의 성장 억제, 지역주의의 정치적 호명과 많은 사회균열의 구조화, 노동운동 탄압,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산업재해와 환경파괴 등의 부정적 폐해를 설명할 수 없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민주화의 지체와 관련, 냉전·분단·반공의 질서를 제도화한 역사적·사회적 기원은 다름 아닌 박정희 시대였기 때문이다.

둘째, 한편 선성장·후민주화라는 견해는 사회경제근대화와 민주주의간의 단순한 상관관계(correlation)를 전자가 후자를 가져다준다는 식의 인과관계(causation)로 비약시킨 논리적 비약이기도 하다. 나아가 박정권의 급속한 산업화 덕분에 오늘날의 정치발전과 민주화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논리는 진지하고도 집중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대체로 이러한 주장들은 '성공적인' 산업화의 어떤 효과가 어떤 경로 속에서 정치의 발전과 민주화의 진전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물론 산업화와 민주화가 긍정적으로 결합된다는 명제를 전면 부정하기란 쉽지 않다.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측면이 없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서구의 경험처럼 부르주아지의 진보적 역할이나 진취적 기업가 정신을 고무시킨 프로테스탄트 윤리도, 남미의 사례처럼 국가 주도의 민주주의적 대중동원전략 때문도 아니었다. 우리의 경우 산업화가 민

주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산업화가 시민사회의 성장과 밀도를 강화시키고, 특히 노동계급을 비롯한 피지배계급의 조직화와 그 조직적 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계급권력의 균형점을 민주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켰다는 점 때문이다(Dietrich Rueschemeyer, E. H. Stephens and J. Stephens, *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1992, pp. 5-6). 사실 긴 말이 필요없이 소련과 동구의 몰락과 라틴 아메리카 등 80년대의 민주화의 물결, 즉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의 절대다수 국가들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실패로 민주화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다. 이에 대해 '실패의 위기'와 '성공의 위기' 모두가, 즉 경제성장의 실패도 경제성장도 모두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식의 '이론 같지 않은 이론'으로 이론의 곤경을 피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민주주의의 진전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역관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박정희정권 시절 민주화의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화시킨 것, 그 근본적인 추동력은 무엇보다 가혹한 시장의 주기적인 공격과 국가의 일상화된 폭력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노출되어 있던 이른바 '개발연대'의 소외된 피착취·피지배 민중들로부터 나왔다. 정치적 참여로부터 배제되고 경제적 분배로부터 소외된 민중과 권력획득의 가능성을 영원히 박탈당한 정치적 야누스로서의 저항야당과의 느슨한 연대전선이 구축되면서 유신독재의 붕괴조짐은 가시화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박정권의 산업화 덕분에 민주화가 가능케 되었다는, 주어와 술어가 생략된 모호한 표현은 "박정권의 산업화는 민중부문을 정치적 참여와 경제적 분배로부터 모두 배제시켰고, 이에 대한 민중들의 부단한 저항과 압력은 박정권의 붕괴와 이후의 정치개방을 가져온 민주화의 원동력이었다"(정상호, 「유산된 민주화, 경쟁의 부재와 통합의 빈곤」, 한국정치연구회 편, 『박정희를 넘어서』, 푸른숲, 1998, 124쪽)는 표현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결국 박정권이 민주화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유례없는 탄압과 억압성을 통해서였던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재, 『김형욱 회고록 : 혁명과 이상 1』 (전예원, 1991)
 김삼웅, 『한국현대사 바로잡기』 (가람기획, 1998)
 김옥두, 『다시, 김대중을 위하여』 (살림터, 1995)
 김종필, 『새 역사의 고통』 (서문당, 1980)
 김충식, 『남산의 부장들 1』 (동아일보사, 1992)
 박원순, 『국가보안법연구 2』 (역사비평사, 1992)
 박정희,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 (동아출판사, 1962)
 박태순·김동춘, 『1960년대의 사회운동』 (까치, 1991)
 손호철, 「다원민주주의적 정치질서와 정당」, 안희수 외 『한국정당정치론』 (나남, 1995)
 손호철, 「박정희정권의 재평가 : 개발독재 바람직했나?」, 『현대 한국정치 : 이론과 역사』 (사회평론, 1997)
 손호철·조현연, 『박정희 통치 18년 : 국가폭력의 일상화와 질식된 민주주의』, 부산민주공원 설립 기념 심포지움 발표논문, 1999
 전재호, 「동원된 민족주의와 전통문화정책」, 한국정치연구회 편, 『박정희를 넘어서』 (푸른숲, 1998)
 정상호, 「유산된 민주화, 경쟁의 부재와 통합의 빈곤」, 한국정치연구회 편, 『박정희를 넘어서』 (푸른숲, 1998)
 조현연, 『한국현대정치의 악몽 : 국가폭력』 (책세상, 200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1』, 1986
 Dietrich Rueschemeyer, E. H. Stephens and J. Stephens, *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cy* (Cambridge : Polity Press, 1992)

4. 박정희와 부패문제

박정희와 부패문제

오 유 석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사회학

1. 권력형 부정비리

1) 부정축재처리의 역사적 실패

4·19 혁명으로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했던 죄명으로 쇠고랑을 찻던 기업인들은 5·16으로 회색하였다.

원래 군사혁명정부의 부정축재 처리는 초강경이었다. 혁명 발발 12일만인 1961년 5월 28일 당대 재계를 주름잡던 재벌 총수들이 수감에 묶인 채 혁명군에 연행되었다. 당시 동경에 머물고 있던 이병철도 예외가 아니었다. 최고회의는 29일 이들의 구속을 발표하면서 부정축재처리요강을 공포하고 그에 따른 부정축재 처리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처리위원회는 부당이득은 모조리 환수한다고 강경 발표했다. 수사는 급진전 되었고 중간발표때 마다 축재액은 늘어났다. 7월 21일 5차 중간발표 때는 726억원에 달했다. 초창기 부정축재 처리의 중점은 거물 재벌의 재산 몰수이었다. 6월 19일 일본에 머물고 있던 이병철씨는 최고회의 의장 앞으로 전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뜻을, 6월 25일 이정림, 최대섭, 설경동, 조성철, 남궁련 등 7명은 공동명의로 전 재산의 국가헌납의 결의문을 보내왔다.

이병철은 6월 26일 밤 김포공항에 내리는 길로 모 호텔에 연행되었는데 3일 후인 29일 오전 서울 중앙공보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공식으로 밝혔다.

6월 30일 부정축재처리위원회는 조사를 일단락 짓고 구속자를 모두 석방했다. 석방되기 직전 박정희 장군은 이들과 직접 만나, 재계인사들에게 하루속히 기간산업 건설계획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모종의 야합이 있었는지 이주일 처리위원장의 "... 산업재건에 이바지할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는 매우 강도 낮은 특별담화가 있었다. 그리고 1961년 12월 30일 최종 통고된 부정축재 환수액은 42억 2천800만원으로 반감되었다. 부패와 구약일소의 한 본보기로 서슬 퍼렇게 시작된 부정축재자에 대한 단죄는 이렇게 6개월도 못돼 경제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절

대절명의 혁명정부의 요청에 따라 정부와 재벌의 밀월(유착)의 막을 여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석방된 인사들은 그 길로 경제재건촉진회(한국경제인협회의 전신)를 구성하고 기간산업건설안을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제시하고 부정축재 환수금의 환수기일 연기와 공장건설 후 주식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건의했고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군정이 마련한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주요사업을 떠맡은 부정축재자의 공장건설은 호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도리어 정부는 이들 부정축재자들에 대한 외자도입, 공업단지조성, 내자지원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단지 경제개발계획에 참여한다는 명목으로 부정축재자들은 더욱 비대해 졌다. 또 다시 국민들로부터 기업윤리와 특혜시비로 지탄받는 기업풍토가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2) 사카린 밀수 사건

1966년 9월 22일 삼성재벌 총수 이병철씨는 한국비료공업(주) 헌납 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건설 중이던 삼성재벌 계열의 한국비료가 건설자재를 가장하여 사카린의 원료인 OTSA 60톤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여 그 중 38톤을 금북화학에 내다 팔았다는 내용이다. 언론은 서슴없이 강경하게 이 사건을 밀어 부쳤다.

“생산이 있기 전에 무역이 있었고 무역이 있기 전에 밀수를 했다. 이것이 한국 재벌 생성의 과거 사인줄 알았던 국민들은 지금도 공장을 짓는다고 밀수를 하고 수출을 한다고 밀수를 하는 재벌의 현실에 이제 대경실색의 상태를 지나 용솟음치는 분노를 억누르는데 온갖 이성을 앞세우고 있다.....”

파문이 번져가자 정부도 사건의 경위를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 급기야 박정희까지 개입, 전면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사카린밀수사건 전담 수사반이 구성되었다. 사건이 호가대되자 이병철 회장이 한국비료 헌납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건은 확대되어 정부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반의 조사를 받는 가 하면 한국비료의 핵심인물들이 구속 또는 불구속 되었다. 다만 이회장이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곧 정계로 확대되었다. 검찰수사결과에 대해 민중당은 박정희에게 경고 성명을 발표하는 가 하면 이러한 파동의 회오리 속에서 김두한 의원의 오물투척사건(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석에 분노를 뿌려 부패정권을 규탄한 사건), 국무위원 총사퇴결의안 제출 등 정치적 사건이 꼬리를 물었고 장준하 의원은 규탄결기 대회에서 박정희를 심하게 몰아붙여 국가원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되기까지 했다.

사카린사건이 밀수나 수입이냐에 대한 공식적인 결론은 아직도 밝혀져 있지 않지만 1963년 3분(三粉)폭리(설탕, 밀가루, 시멘트)사건과 함께 그것이 누군가 상당히 부당하고 부정한 이득을 챙기기 위해 굶주림에 허덕이던 국민을 담보로 일어났던 일인만큼 최고 권력자와 무관할 수 없다.

3) 4대 의혹사건과 정치자금

최고회의는 그 직속에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정보사항 및 범죄 수사활동을 감독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중앙정보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중앙정보부법을 공포하였다. (1961년 6월 10일) 군사정권은 중앙정보부를 가장 핵심적인 권력장치로 삼아 우선 이를 통해 공무원의 심사에 착수, 관료체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내부지배를 공고히 했다. 그리고 정보부조직을 근간으로 민주공화당을 창당, 여기에 지식인, 관료를 흡수한 민주공화당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기구를 가진 정당으로 부상했다.

새로이 구성될 민정을 장악하고 그 선거과정에서 경쟁상대인 구 민간정치인을 정치정화법으로 묶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일부는 포섭하는 분열통치의 수법을 악용하여 정치권에 불신의 벽을 쌓았다.

이와함께 군사정권은 자금원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개혁, 통화증발등의 경제 조치를 단행하여 반대세력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감소, 고갈시키고 국내 시장조작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확보했다. 이른바 새나라자동차 사건, 삐쟁고 사건, 워커힐 사건, 증권파동 등의 4대 의혹사건이 그것이다.

① 새나라 자동차 사건

중앙정보부(부장:김종필)가 일본으로부터 1, 642대의 닛산 승용차를 면세(자동차의 정상적인 관세는 110%)로 수입하여 '새나라'란 이름으로 수입가의 두배로 판매한 사건이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62년 블루버드란 이름으로 도입된 날씬한 승용차가 서울 거리에 나타났다. 이 블루버드 400대가 새나라라는 이름으로 시발택시를 몰아냈다. 외국인 관광용 150대, 일반관광용 250대 모두 관광용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다. 물론 관세도 물지 않는 특혜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들 관광차는 곧 일반택시로 모습이 바뀌었고 3-40만원 하던 시발차는 6-7만원 선으로 폭락 그때 까지 한국 자동차산업을 이끌어 오던 시발자동차의 도산을 강요했다. 블루버드의 바퀴자국은 의혹으로 차게 되었다. 새나라자동차는 이어 조립용부품 1, 721대분을 들여와 국내에서 조립판매하여 단번에 국내 승용차 시장을 휩쓸어 버렸다.

1962년 1월 29일 새나라자동차가 설립되었다. 김종필과 제일교포 실업인으로 알려진 박노정씨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이 자동차 공장은 4대 의혹사건의 호가대, 김종필의 출국 등으로 63년 1월부터 공장이 문을 닫았다.

② 워커힐사건

혁명주체였던 K씨는 외화획득의 일환으로 관광사업을 착안, 동양최대의 관광지로 워커힐을 건설기로 했다. 소요자금 65억원(화폐개혁 후 6억5천만원). 정부와 정부관리기업체의 출자와 정부

보증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아 건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워커힐의 모습이 갖추어져 가면서 의혹의 골짜기는 깊어갔다. 외회부족으로 경제위기가 감도는 판에 무슨 돈으로 외국자재를 들어오는가, 공사자금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고 있다는데.. 등등. 의혹은 사실로 들어났다. 소장과 과장이 공사자금을 부정유용했고 보관중인 입찰보증금이 행방불명되었다. 워커힐 자재중 일부가 공화당 보수를 위해 빠져나갔고 시공업자와 발주자 사이에 뇌물이 오갔다. 이 워커힐인 63년 4월 8일 개판되었는데 그날 자금 유용과 수취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주한미군의 돈을 노렸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큰 문제가 되었다. 마야나 도박장, 댄스홀 등 유흥장이 폐쇄된 까닭에 마땅히 한국에서 휴가를 보낼 곳이 없는 미군들을 대상으로 건설이 계획되었고 여기서 얻어지는 이득은 공화당의 정치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미국언론(The New York Times)에 보도되자 미군당국은 워커힐을 출입금지 시켰고 이에 따라 막대한 재정난이 발생하기도 했다.

③ 빠쟁꼬사건

의혹은 꼬리를 물었다. 새나라자동차사건이 한창일 무렵 돌연 임시국무회의에서 회전당구대(빠쟁꼬) 시설의 폐지조치가 의결되었다. 회전당구는 5·16 이전 이미 도입되었던 것이나 그후 혁명정부가 금수품목으로 막아놓고도 재일교포의 재산반입 명목으로 880대를 면세로 수입허가한데서 의혹이 비롯되었다. 더구나 정부가 3개월 시한부로 전입기간을 두었다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니 기존 34개 업소는 8,000만원의 시설비와 선불세금의 피해를 입었다.

④ 증권 파동사건

증권 파동의 주역과 주변인물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파동이 일어난 10개월 뒤 그러니까 김종필, 김용순 씨의 뒤를 이어 김재춘부장이 취임한 후 정보부 수사를 통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 이 사건은 혁명정부가 공화당 사전조직의 자금 조달을 위한 방편으로 이권과 결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정치자금을 마련해 보자는 의도로 구상되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이때의 증권 파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거지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되었다.

세칭 4대 의혹사건 뿐 아니라 재일교포 재산반입사건을 포함 군부지도자들 사이에 터져 나온 각종 의혹사건들은 공화당 사전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써 구악을 일소시키겠다던 혁명정부가 구세대 보다 깨끗할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 스위스 비밀은행의 정치자금

1960년대 대통령비서실장, 1970년대 초반 중정부장을 지낸 이후락씨는 1980년 봄 유명한 '떡고물'이라는 발언을 했다. 정치자금은 그 조성과정이나 용도도 문제이지만 더 뒷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조성자의 손에 들어가는 '떡고물' 때문이다. 이후락씨는 정치자금조성에 깊이 관여했고 국내

의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교통정리하고 '검은돈'을 주물렀다.

대미로비사건으로(박동선 사건) 한미관계가 한계상황으로 치달던 70년대 후반 미의회국제(한미)관계 소위원회 보고서(프레이저보고서)에도 이후락은 가장 빈번한 논의 대상이었다.

이후락(중정부장) : 스위스에 비밀정치자금을 예치하고 관리함

김성곤(국회의원, 기업가) 수표로 지불되는 정치자금을 수집

김형욱(중정부장) : 수표를 현금화하고 현금으로 지불되는 정치자금을 수집(프레이저보고서 346쪽)

정치자금원으로서의 이후락의 역할과 스위스은행 비밀계좌는 이후락의 아들 이동훈의 소위 증언에 의해 상세히 확인되었다.

이동훈은 소위에서 "스위스 은행자금은 박정희 대통령이 사용하기 위한 '정부자금'이었다"고 진술했다. (청와대 고위 측근들에 의해서도 비밀계좌 존재는 확인됐다) 그러나 물론 그 자금이 대통령의 사적(私的)인 돈은 아니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쫓아낸 야당지도자 및 자신의 지지자들을 위해, 그리고 군(軍)의 충성을 보증받기 위해 다시말해서 자신의 장기 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막대한 정치자금이 필요했다.

프레이저보고서에서는 박정권이 1971년 4·27 대선자금 600-700억원 (그해 예산 5,242억원의 10%가 넘는 액수)에 미국의 기업들도 한몫 거들었음이 드러났다. 석유사인 걸프는 선거자금 1000만달러 요청을 받고 300만달러를 냈다. 걸프는 1967년 대선때에도 1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스위스 은행 비밀계좌에 넣어 달라는 이후락 비서실장의 요청에 따라 정치자금을 냈다. (걸프사 극동조정관 허버트 굿맨의 1975년 소위 증언). 그대신 걸프는 현금의 대가로 유공과 손잡고 엄청난 폭리를 취했다. 1971년 칼텍스 석유사들도 정치자금 100만 달러를 스위스은행에 넣었다. 이 돈들이 모두 공화당 정부로 들어 간 것으로 보고서는 판단하고 있다. 이 무렵 총기 메이커 콜트도 경호실장 박종규 측으로부터 1971년 선거자금 헌납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지하철 전동차메이커 미쓰비시 등도 1971년 120만 달러를 미은행 계좌로 이전시켜 정치자금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 지하철개통(1974년 8월 15일) 이전부터 지하철도입을 두고 정치자금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다. (최근 고속철도를 둘러싼 검은돈과 정치자금의 커넥션과 마찬가지로)

5) 조선일보와 코리아나 호텔

박정권은 언론에게 각종 특혜를 베풀어 언론이 제 사명을 잊고 오직 상업적 성장에 몰두하게 유도했다. 1967년 당시 일반 자금의 대출금리가 25%였을 때 신문들은 18%의 낮은 금리로 대출특